

광복 68주년 정부수립 65주년, 오늘의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논란 끝내야 한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존립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은 영토라는 것이다. 근자에 NLL 문제를 두고 전직 대통령이 평양에서 한 발언 내용을 보면서 다시금 남북한 관계를 두고 국가 정체성을 생각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발언은 진위 여하를 떠나 한반도에서 국가의식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돌이켜 보게 한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독립운동이 전개되면서, 의식의 주류는 민족해방에 있었다. 그때 민족해방의식의 주된 내용은 구질서적인 왕정복고가 아니라 새로운 근대공화정적인 민족국가를 만든다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서 주장된 것은 단순히 집단으로서의 민족해방 또는 독립만이 아니라, 구질서를 떠난 개인의 해방이라는 것이 동시에 포함되었었다. 여기에는 기독교 뿐만 아니라 일본에 유학하거나 국내에서 이른바 신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새로이 해방된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국가 형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식민지 상황 공산주의 영향

이 해방된 독립적 개인은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인권, 즉 자유와 평등의 주체로 인식되었었다. 이는 나중에 대한민국 헌법에 고스란히 제도적으로 수용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에 대한 다른 사상이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으로 대립각을 이루었었다. 구미의 인권이라는 것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모든 사회적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기능뿐이므로 개인과 사회의 일체성을 도모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명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나중에 좌우로 갈리면서 하나는 나치즘으로, 다른 하나는 국제 공산주의로 나타났었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식민지 상황 때문에 후자가 압도적이었다. 이른바 형식적 자유 평등에 대하여 실질적 자유 평등을 대립시킨 것이 그 단적

인 표현이었다.

지식인들에 의한 이러한 인식은 50~60 연대까지 대학에서조차 낭만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환원주의가 의식의 저변에 깔리어 정치영역에 대해서는 경시나 멸시의 태도가 습관처럼 된 면이 있었다. 이것이 막연하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심성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로 남북한의 체제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거의 없었다시피 했고 지금도 그

특별기고



노재봉

·전 국무총리

대한 지도자 오바마 대통령 만세'라는 현수막이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승만과 김구는 모두 독립투쟁을 한 분들인데, 이들은 그 와중에서 국제공산주의는 단호히 배격했었다. 특히 이동휘와 김구의 대화는 지금도 새삼스럽다. 이동휘는 레닌주의의 공산주의에 경도된 사람으로서 어느날

김구를 불러, 어차피 피를 흘릴 바에는 두 번 흘릴 것을 한번 흘리게 함이 어떨까 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운동에 동

둘 중 하나 뿐이다. 북의 전체주의라는 것은 스탈린주의나 조지 오웰의 상상에 해당 되지 않는 체제이다. 그 체제를 표현할 개념이 없다.

그럼에도 그것이 민족을 들먹이니,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의 상당한 사람들이 감상주의에 빠져 도와야 한다며 야단들인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제법 온건한 사람들은 환상에 빠져 단일하게 통일된 체제에서나 의미를 가질 법한 기능주의에 빠져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부류는 사랑에 호소하기도 한다. 국제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북한에 대해 지원 운운하는 것은 그 범죄에 힘을 보태주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니다. 막연한 인도주의가 반인도주의의 동조자라면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을까 싶다.

NLL발언 심각성 깨달아야

어느 나라 보다 심하게 개인주의가 진전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공동체의 규범이 약화되어가는 현실을 그대로 대표한 것이 앞서 말한 NLL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라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을 그 개인의 의식의 표현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가 정체성과 관련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들을 두고 재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들을 생각하면 이것을 시대정신이라하여 치부해 버릴 일은 아닐 것이다. 내재적 논리라하여 극단적인 상대주의로 허무주의에 가까운 궤변을 두둔하며, 최소한의 인권도 찾아 볼 수 없는 북한을 어찌자는 것인가. 국가정보원의 개혁도 좋지만, 의견이 다른 것은 좋으나 전복은 안된다는 원칙을 세워 국내외의 구분없는 활동을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마치 정신박약아 같은 방향타를 상실한 정치권의 연동들을 보면 그것이 비단 그들만의 수준때문인가 싶다.

국민의 수준 이상 정치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일진데, 의식세계를 지배하는 언론부터 자세를 가다듬을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K]

자유민주체제는 피할 수 없는 歴史的 선택 방향타 상실 정치권 언론이 바로 잡아줘야

사정은 별로 달라진게 없다. 정치적으로 나치즘이나 공산주의는 모두가 이른바 전체주의 체제였다. 거기에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가치라는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정치철학의 어떠한 체제구분 개념에도 포함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국제공산주의 연결된 北체제

북한은 그러한 전체주의를 수용한 체제로 시작된 집단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공산주의에 연결되어 있었다. 민족을 말한다는 것은 애당초 반동적인 의식으로 낙인 되었었다. 남로당이 반탁에서 곧장 찬탁으로 돌아섰던 것이나, 6·25 전쟁시 인민군 치하에서 어디에나 스탈린 사진이 걸려 있었고 '위대한 지도자 스탈린 원수 만세'라는 선전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던 것도 좋은 예의 하나이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위

참할 것을 종용한 바 있는데, 이때 김구는 독립도 안된 처지에서 남의 지배를 따르자는 것이냐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한 바 있었다. 이승만과 김구 두 지도자는 나중에 정치적 역정을 달리했지만 국제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납도 하지 않았었다.

北선전 낭만적 동조에 경각

그러나 뒤늦게 북한이 민족이니 우리끼리니 하며 선전을 해오자, 막연한 낭만적 관념으로 동조하는 세력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민족통일이라는 말에는 어떤 이의도 달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최면술에 걸린 결과이다. 민족은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되어 있었다. 분단은 민족분단이 아니다. 그것은 체제분단이다. 따라서 통일문제의 핵심은 민족통일이 아니라 체제통일이라고 봄이 옳다고 생각한다. 선택은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그

광복 68주년 정부수립 65주년, 오늘의 대한민국

종북 교육 시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세 번이나 언급

박근혜대통령은 취임후 국사교육 개선을 공식 석상에서 3번이나 언급했고 새정부의 국사편찬위원장 경질도 검토했으나 교육부는 검인정 국사교과서의 오류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대통령은 3월13일 국가 원로와의 오찬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외세 앞잡이로 폄훼(貶毀)한 ‘백년전쟁’의 “역사왜곡은 국가 정통성과 안보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6월17일 수석회의에서는 고교생 69%의 6·25 오해는 “충격적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7월10일 논설실장 해설위원장과 오찬에서는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한국사 수능필수 과목화도 언급했다. 박대통령은 “국민의 혼과 같은 역사를 잘못 가르쳐 학생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부 전교조 교사의 좌편향 의식과 교육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 역사학을 모방해 사회주의운동을 과대하게 부각시킨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일부 사회과학자들은 “왜곡된 교과서를 교재로 잘못 가르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것이 낫다”고 극언을 했다. 좌편향 집필진이 만든 교과서와 전교조 교사 문제를 해결 못하고 국사 교육 시간만 늘리는 강화안은 더 큰 문제라는 고언이다.

실무 담당자도 왜곡 공모자 가능성

박대통령은 교육개혁 첫 작업으로 역사교육 개선을 교육부에 주문했으나 교육부는 MB정부 때 처럼 소극적이다. 담당자들이 좌편향 국사교과서 왜곡의 공모자이거나 무사안일주의에 찌지처럼 절어 개혁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고 일선 교육자들은 비판한다. 역사교육 개선 과제로 전교조 교사의 종북사관 극복·좌편향 사관으로 제작된 교과서 전면 개편·좌편향 정치 세력 및 역사학으로부터 역사교육의 해방 등을 원로 지식인들은 역설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육 개혁 의지는 분명하고 꼭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접근하면 교과서 개편도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MB 정부는

취임 첫 해 10월 노무현 정권의 근·현대사 교과서의 253개 오류 중 157건을 수정 대상으로 공식 발표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저해하거나 자긍심을 훼손하는 왜곡된 내용이 역사 교과서에 담겨서는 안 된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 MB정권이 검인정해서 2011년 펴낸 고교 한국



박석홍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좌편향 교과서 수정 구체적 제시 전교조-민중사학자 고리 끊어야

사 교과서나 2013년 펴낸 중학교 역사(하) 교과서는 노정권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와 대동소이하다는 혹평을 받았다. MB가 YS·DJ·노무현 정권의 좌편향교육 담당자들에게 역사교육 개선을 맡겨 개혁 대상 교과서와 대동소이한 책이 또 나온 것이다. 개혁 청사진이나 방법론 없이 미봉책으로 안이하게 접근 했기 때문이다.

누적된 행정 부조리 개선해야

MB의 실패를 거울 삼아 박대통령은 큰 틀로 치밀하게 개혁할 것을 권고한다. 박대통령은 YS에서 MB정부에 이르기까지 20년간 누적된 교육 행정 부조리를 청산하는 큰 교육 개혁 목표부터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역사교육 문제도 수술해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장학실 편수관실 등 교육 전문직을 우대하는 직제 개편과 고급공무원 물갈이 등으로 교육부 체질 개선부터 단행 해야 한다. 교육이념·학기제·교육비·교육평준화·입시·교사양성 등 교육행정 현안과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의 개선과 구성원의 질 제고를 모색하는 교육개혁안을 사회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청와대가 끌고

나가야 한다. 가장 시급한 역사교과서 개편도 청와대가 좌편향 정권이 보급한 교과서의 편향성과 오류의 뿌리부터 밝히고 구체적인 수정방안을 제시 해야 비로소 교과부가 움직이고 새로운 교과서가 나올 것이다. 좌편향 역사 교과서는 YS·DJ·노무현·MB정부와 전교조 교사, 민중사학자의 공

동 작품이다. 이런 강적과 대적하기 위해 박근혜정부도 정치 경제 언론 헌법학 서양사학 인류학 분야의 대표 학자를 현대사개편 위원으로 위촉하여, 역사교과서 오류의 뿌리부터 분석하고 새세대에게 올곧은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심어줄 기본 방향을 도출해서 공론에 부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통성 까지 흡집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시끄러운 문제가 된 것은 YS 정부 출범 부터다. YS는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부인하고 김영삼정부가 상해입정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선언,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시비에 불을 붙였다. DJ는 전교조를 인정하고 대북포용을 역설함으로써 반공정책을 펴온 과거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를 무너뜨리고 6·25를 ‘실패한 통일전쟁’이라고 규정하여 종북 세력의 통일관을 확산시키는데 한몫을 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 혹은 “특권과 반칙의 역사”라고 주장, 자학적인 역사해석과 함께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됐다는 반미교육의 단초를 제공했다. 김대중·노무현

좌편향정부 집권 중 자리잡은 종북자학사관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를 선도한 이승만·박정희대통령을 폄훼하고 이들이 주도한 건국·6·25전쟁·산업화 시기를 부끄러운 시대로 선전 선동하고 있다. 역사교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부인하는 선전 선동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 것이다. 한국현대사학회는 중고교 한국사교과서가 친사회주의 친북방향으로 기술되어 지나치게 좌편향적이라고 분석했다.

독립운동사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대중계몽과 외교활동은 평가절하하고 무장투쟁과 국제공산주의와 연결된 사회주의 운동만 과다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김구의 백범일지는 임시정부가 좌·우 분파적 싸움이 노골화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받아들인 붉은 돈이 투입돼 열린 국민대표회의를 잡동사니회 였다고 혹평 하고 김구 내무총장 직권으로 모스크바 돈 횡령범을 사살함으로써 마무리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좌편향 교과서 집필진은 한국독립을 연합국이 합의 서명한 카이로선언으로 결실을 맺은 이승만건국대통령의 위임통치청원을 편향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건국전야 남로당의 폭동과 김일성과 동조해 건국을 반대한 세력을 높이 평가한 기술도 보이며 6·25를 아직도 내란으로 기술한 교과서도 있다. 학계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개인이론들이 교과서에 실린 것이다. 대한민국사를 전반적으로 어둡게 조명하여 자긍심보다 자학적인 역사관을 갖게하는 점이 무엇보다도 문제다. 역사서술에서 기본인 정확성·진실추구·중립성이 결여된 정파주의적 교과서 서술은 수정 돼야할 것이다.

아지프로(선동선전)문학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호승시인이 “그리운 미친년, 창녀, 술집작부, 바람난 어머니 등의 시어로 쓴 유관순 연작시가 유관순열사를 욕되게 했다”고 사죄하는 신문광고를 7월12일 발표했다. 종북자학사관 파동이 문학과 국어교육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국사국어 윤리교육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문]

이 시대 참 언론인을 찾습니다 2013 대한언론상 공모

대한언론인회는 언론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2013년도 대한언론상(제21회) 수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심사대상은 일간신문, 통신 방송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기획 취재 보도, 논설 논평분야로 합니다. (수상자와 시상식 날짜는 10월 1일자 회보에 발표)

응모 요령

- 분야 : 1) 기획취재 보도 분야
2) 논설 논평, 언론학술 연구분야
- 대상 : 일간신문 통신 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
- 공적기간 :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

- 구비서류 : (개인) *이력서 *사진 2장(명함판) *세부 공적내용(A-4용지 2페이지 이내로 작성)1부 *소속단체장 추천서(A-4용지 1페이지 이내로 작성)1부 (단체) 단체장 추천서 1부 *공적 자료 및 관련 사진 첨부
- 접수마감 : 2013년 9월 17일 오후 5시

- 수상자발표 : 11월 1일자 ‘대한언론’ 지상(시상일 추후통보)
- 접수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100-745) 전화 02)732-4797~8, 02)2001-7621

광복 68주년 정부수립 65주년, 오늘의 대한민국

日 우경화 국익따라 유연한 대처 필요

일본정치는 2012년 말 아베정권의 출범 이래 우경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의 과거사관련 망언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우익정치인들이 내각에 대거 포진하며,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대규모로 집단 참배하였다. 애국교육을 강조하면서 교과서 왜곡을 시도하고, 주변국들과 영토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인터넷 우익의 대두와 민족증오행위의 증가도 우경화를 한몫 거두고 있다.

日 국력쇠퇴 불안감 커져

이런 우경화의 배경은 무엇일까. 일본은 1990년대 버블붕괴이후 디플레로 경제가 축소되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였다. 지금 일본의 중심세대들은 월급봉투가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삶의 황금기를 보냈다. 2010년 세계2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중국에 내어주었다. 이와 같이 국력이 쇠퇴하는데 대한 불안감은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의 자양분이 되었다.

최근 센카쿠(다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일·중 갈등은 중국의 부상과 따른 동북아에서의 세력전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개발을 꾀하는 북한의 안보위협과 함께 일본을 보수우경화하는 대외적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아시아재균형정책과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동아시아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일본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으로, 1970년대 초 미·중접근으로 인한 닉슨쇼크의 망령이 일본인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다.

국내정치적으로는 전후 일본을 이끈 자민당 중심의 1955년 체제가 붕괴되었으나, 이를 대체할 정치체제가 아직도 형성되지 않은 점도 작용한다. 매년 총리가 바뀌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도 크다. 민주당의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여론이 등을 돌리면서 자민당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다른 야당들도 분열되어 있다.

전후세대 전면포진 큰 영향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군정 당국이 냉전의 격화로 일본에서 탈군국주의화 작업을 중단하였고 일본 스스로도 전후책임 청산할 기회를 놓친 데 있다. 과거에 대한 왜곡, 미화를 통해 일본국민의 자긍심을 되찾겠다는 우익의 잘못된 생각이 먹혀들 여지를 남긴 것이다. 또한 탈냉전과 함께 전후책임을 강조하는 진보진영이 몰락한 것도 우익 세력의 활동공간을 넓혔다. 거기에서 전전(戰前)의 잘못된 역사와 그 부의 유산을 직접 체험하였던 세대들이 퇴진하고 이를 모르는 전후세대들이 전면 포진하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일본은 주변국의 반발과 일본 국내에서의 비판으로 우익적 행태가 소

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7월 21일 아베 신조 총리가 대승한 참의원 선거는 향후 3년간 큰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일본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에 대한 높은 지지로 연립여당은 과반수를 넘은 안정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 관심은 정치적 안정을 확보한 아베

특별기고



신각수

·전 주일대사

만큼 난제다. 규제 완화,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TPP 가입 등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경제회복을 우선해야 할 아베정권으로서는 한정된 정치력을 분산하는 게 쉽지 않다. 또한 우경화정책 추진으로 최대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아베노믹스에 부정적 영향

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분야에 대해서는 자제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일동맹 강화로 연결되는 자위대 위상 강화와 집단적 자위권 용인은 계속 추진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영토문제에 관한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애국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결국 대내적 요구와 대외적 역제를 적절히 절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서 공동 편찬등 추진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일본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조치에 대하여 우경화라는 큰 프레임보다는 사안별로 정확한 분석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국익계산에 입각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가 취한 대응조치가 오히려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를 더욱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북한문제 해결을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일본의 협력이 불가결하고 대일관계가 우리의 주변국관계 전반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 원만한 한일관계는 우리외교의 기축인 한미관계와도 연관이 있으며, 새로이 강화되고 있는 한중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올바른 역사인식이 건전한 한일관계의 토대라는 점에서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필요하고, 일방적으로만 비쳐지는 요구는 피로현상을 가져온다는 점에 비추어, 일본 스스로 과거사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본의 전후 변화와 아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는 평가해주면서, 전전 역사에 대한 부정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2기가 끝난 후 정치 상태에 있는 한일역사공동연구를 하루빨리 재개하고, 한일 및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을 꾸준히 추구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동아시아 근대사를 철저히 교육하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공동노력이 시급하다.

한편 일본국민 전체가 우익적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익 정치인들이 일본사회의 보수화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일본 내에도 전후 평화헌법 아래서 향유한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여론의 지배를 받는 선진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 여론도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긴 안목으로 양국 국민간의 교류와 협력, 특히 시민사회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일본인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일깨워주고 일본의 우경화가 가져올 문제를 인식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과거사 문제 원칙따라 단호대응 日 스스로 정리하도록 유도 필요

정권이 그동안 보류해왔던 우경화 정책을 현실로 옮길 것인가에 모아진다.

아베정책 국내외 제약많아

아베 총리가 집권여당의 참의원 다수 확보 실패로 인해 지난 수년간 계속된 일본국회의 ‘뒤틀림 현상’을 극복한 여세를 몰아 우경화로 몰고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임후 다시 등판한 총리로서 우경화 정책을 무기로 재집권하였고 추진을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아베 정권이 현실적으로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국내외적 제약이 있다.

첫째, 아베 총리의 인기는 우경화 노선보다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에 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 실시한 금융완화 및 재정투융자 증대를 넘어 성장정책을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7년간 7번의 성장정책을 발표한 전례가 있을

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둘째, 일본 내에서의 견제도 예상된다. 자민당 내에서 안보를 제외하고는 보다 합리적인 대외정책을 표방하는 이시바 간사장 등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연립여당 내에서는 공명당이 우경화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막상 개헌절차에 들어갈 경우 과연 일본국민이 현 평화헌법 개정에 적극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셋째,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은 과거사관련 수정주의적 경향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고 일본은 패전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볼 때 그 방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과거사관련 제선언의 수정 등 대외

‘우리사회 언론 난립과 그 폐해...’ 대한언론인회 대토론회 개최

9월 10일 프레스센터서

대한언론인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 사회 언론 난립과 그 폐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갖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회우 여러분에게는 이 기사로 초청장을 대신 합니다.

○ 일시 : 2013년 9월 10일(화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발표 : 임영호(언론학·부산대 교수)

○ 토론자 : 홍정기(문화일보 논설위원)

전희경(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정책팀장)

한중광(한림대 객원교수·전 KBS 인터넷 사장)

김영환(본보 편집위원·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 사회 : 문명호(본회 주필·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북한 인권법’ 돼야 北식량난 풀린다

2012년 제18대 국회가 끝날 무렵 야당 원내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북한인권법 통과 저지를 들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북한주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입장에서 2005년부터 국회에 제출된 북한인권법안들을 필사적으로 반대해왔다.

먹는 문제를 앞세우는 야당 측 주장은 북한 식량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북한에 적극적으로 식량을 지원하자는 내용으로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어째서 북한에는 90년대 중반 3백만 명의 아사자를 내고도 자연재해가 아직까지 계속된다는 말인가? 식량부족이건 자연재해건 그것은 자연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생산방식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에 틀림없다. 설령 지속적인 식량부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권이라면 긴급식량도입을 하면 된다. 금수산 기념궁전 조성비용 9억 달러나 미사일이나 핵개발에 사용되는 수십억 달러의 금액이면 북한식량부족분의 10년 치는 쉽게 확보하고도 남는다.

북한 정권은 외부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 원칙’에 따라 주민들의 어떠한 비판도 가혹하게 처벌하는 폭압통치의 수단을 통해 인류최악의 범죄들을 지속하고 있다.

뱅크 출신으로 199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아 센(Amartya Sen)교수는 “대량 아사사태는 식량부

족보다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더 큰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지구상의 대량 아사사태는 독재국가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이들 국가에 아무리 식량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굶어죽는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배만 불리는

특별기고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전 통일원 차관

는 연령을 제한하려 한다. 예컨대, 고난의 시기에 남편을 잃은 젊은 주부의 경우 그나마 생존수단으로 의존해오던 장마당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일반주민들은 국가배급이 끊어져도 장마당을 통해 생존하는 법을 이미 터득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식량배급

일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북한주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관계기관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북한주민들이 바깥세상을 알게 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야 한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다. 북한인권법을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마치 나치시대 유대인 학살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 80년대 한국민주화 과정의 주역이었다고 자처하는 인사들이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것은 희극과 같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인권에 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는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의 주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게 되어 강제수용소에 끌려갈 위협을 받지 않을 때, 정권의 식량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 그리되면 식량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20년 이상 지속된 북한식량문제는 외부지원이 적어서가 아니다. 북한정권의 의지가 없어서였다.

북한주민들의 식량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이 북한인권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연장시키면서라도 북한정권의 편을 들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한 정권의 편을 드는 세력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머지않아 통일의 날에 고통받던 북한 동포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할지 양심을 가지고 준비하기 바란다. [4]

주민들 바깥세상-인권에 눈떠야 외부지원 정권유지에 전용못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부 인사들은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당 간부나 군인들의 배를 불린다 하더라도, 본래 그들이 소비했을 식량이 장마당에 흘러나오게 되어 장마당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일반주민들이 쉽게 쌀 구입을 하게 되므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매우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반대한다. 북한 공산정권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게 되면, 붕괴된 식량배급체계를 복원시키려 한다. 주민통제의 가장 핵심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장마당 개장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장사할 수 있

이 아니라 장마당이다.

요컨대, 90년대부터 시작한 북한의 식량난이 20년이나 지속되는 이유는 정권이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의하면 식량권을 보장할 1차적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 유엔 기구들의 각종 보고서는 자연재해조차도 당국이 책임져야 할 인재(人災) 때문이고, 문제의 핵심은 정권에 의한 식량배분의 의도적 통제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과거 햇볕정책 당시 북한 인권을 외면하던 입장에 수정을 가하여, 2010년 12월 6

호국-보훈 기념일 보도 너무 소홀하다

최근 국내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한국전쟁은 북침’으로 알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 내용을 보도한 서울신문은 입시 전문사인 진학사와 함께 최근 전국의 고등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2013년 청소년 역사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의 69%(349명)가 한국전쟁을 ‘북침’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8년에도 피랍탈북인권연대 산하 ‘선진통일교육센터’와 뉴라이트 학술단체인 ‘자유민주연구학회’가 그 해 9월 초 한국통계정보연구원에 의뢰해 서울 초중고교의 학생 1,955명(초등 778명, 중 654명, 고 523명)을 대상으로 통일외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에서 ‘6·25전쟁을 일으킨 나라’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라고 답한 응답은 59.9%(초 44.5%, 중 70.5%, 고 69.6%)에 그쳤다. 특히 초등생 중

공정언론시민연대 신문-방송기사 분석

35.1%는 한국, 중학생의 12.1%는 일본을 지목했고, 중학생의 37.3%, 고교생의 31.8%는 6·25전쟁이 일어난 해를 모른다고 응답했다.(동아일보 2008년 10월 6일자, 초등생 35% ‘6·25 일으킨 건 한국’ 보도)

이같은 실정에 대해 주변의 많은 분들이 1차적으로 교육당국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학교에서만 역사문제를 접



이동훈

·공정언론시민연대 정책실장

한다고 단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됐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접하고 있는 요즘엔 오히려 학교교육보다 각종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언론매체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오히려 설득력 있는 것 같다.

이에 우리 사회의 공정 언론을 구현시키고 감시하는 시민 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그렇다면 한국의 주요 TV매체와 중앙 일간지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지상파 3사와 주요 5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역사적 사건(6·25전쟁 발발일)과 호국선열 추모일(현충일) 당일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을 분석,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를 알아 보았다.

우선 지상파 3사의 보도내용을 분석해 본 바 뉴스보도에 있어선 3사가 연평균 2.5건에서 3.3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특집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 해선 뉴스보도와 완전히 큰 편차를 보

5면으로 이어집니다.

‘김영란법’은 부득이한 砒霜이다

역사를 보면, 정유재란 때 도요토미의 죽음으로 왜군이 조선에서 철군하려고 명나라 제독 진린에게 재물을 바치고 퇴로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진린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장면이 나온다. 이순신 장군 역시 왜군으로부터 재물과 함께 동일한 요청을 받았지만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전투를 벌인 끝에 전사하였으니 바로 노량해전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한 점은 왜군이 적장에게 재물을 주면서 퇴로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명군 진린은 이를 수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이 삼국지에도 보이고 중국 역사에서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이례적인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다.

고려와 조선조에서 지방관아의 향리에게 녹봉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래서 요령껏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잘 알려져 있다. 나라가 백성에게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주지 않고, 향리는 공직에 있으되 알아서 돈을 챙겨 녹에 대신하도록 제도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어디가 공(公)이고 어디가 사(私)인지 도무지 구별할 수 없다.

어떻게 적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적행위를 할 수 있을까?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동양문화에서는 비록 적장이지만 ‘예물’을 보내면서 정중하게 요청한 것을 거절함은 예가 아니라는 동양적 사고방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 아닐까? 향리가 뇌물이나 다름없는 돈을 받아 생계를 꾸리도록 강요하는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과 사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은 것이 전제임은 분명하다.

이런 전통이 지금도 남아 우리나라에서 공과 사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선물과 뇌물의 구별도 뚜렷하지

않은 것 아닐까? 이런 풍도가 수천 년 역사에 녹아들다 보니 부정부패는 우리사회의 문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체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별로 받지 않으면서 뇌물을 받게 된다. 받았다가 걸리면 재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특별기고



이재교

·세종대 교수
·변호사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금품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안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과잉처벌이라고 반발해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정안이 만들어졌다. 과태료라...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고

직접 친분이 없어도 된다. 담당자와 연결되는 고리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연결고리에는 기름을 쳐야 연결이 부드럽게 되는데, 그 윤활유가 이른바 떡값이다.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력한 공무원에게 대가성없이 주는 것이 떡값이요, 평소 접대를 하면서 우의를 다질 필요가 있기에 생겨나는 것이 스폰서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하는 뇌물죄는 이러한 유형의 부패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총리실의 중재안도 종전의 뇌물죄와 동일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김영란법’이다.

이 법이 법리적으로 다소 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패가 각종 고리와 연결되어 돌아가는 우리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과 같은 강경방안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속칭 ‘오세훈법’이 우리 선거문화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상기해보자.

사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자유보다 부정선거를 막는 것이 더 급한 일이었기에 일종의 비상(砒霜)이라고 할 처방을 쓴 것이고, 그 결과 부정선거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했다.

공직자 부패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이라는 비상을 써서 퇴치시킬 필요가 있다. 정상처방으로 부족하면 조심스럽게 비상이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제정하여야 한다. [4]

正義보다 情誼가 앞서는 풍토 우리사회 ‘고리’끊는 극약 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패는 아시아의 내로라하는 나라 중에는 최고 수준이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비교대상조차 못 되고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보다도 심하다. 우리보다 부패가 심한 나라는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인도 정도다.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45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세계10위의 경제선진국이 청렴도 45위의 청렴후진국인 것이다.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종전의 뇌물죄나 특가법으로는 부패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부수립 후 60년의 경험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그 특단의 방법으로 제안된 것이 이른바 ‘김영란법’이다. 작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버릴 경우 물리는 게 과태료인데, 공직자가 부정한 돈 수백만원을 받았음에도 과태료나 물린다? 좀 이상하다.

수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총리실이 중재에 나섰다.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듯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우리사회가 정의(正義)사회 아닌 정의(情誼)사회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사돈의 팔촌을 포함한 친인척은 물론 친구의 친구, 동창의 동창으로 무한 증식하는 지연, 학연의 고리로 연결되어 ‘좋은 게 좋다’고 서로 편의를 봐주고 위법·탈법에 눈감는 게 우리 사회다. 담당공무원과

4면에서 이어집니다.

여겼다. KBS는 지난 10년간 특집프로그램 편성을 매년 평균 3.1건을 보여준데 비해 MBC와 SBS는 매년 채 1건도 방영하지 않았다.

MBC의 경우 6·25전쟁 발발일 당일 보도나 프로그램에 있어 10년 중 5년은 편성없이 지나갔으며, SBS의 경우 10년 중 7년을 특별 편성 프로그램 하나 없이 지나갔다. 특집방송의 내용면에서도 KBS의 경우, 그날의 의미를 조명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려고 한 반면 MBC와 SBS는 특집프로그램 편성을 최소화하거나 영화방영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주요일간의 경우 현충일 보도와 관련하여 보수성향의 매체는 연평균 2.4건에서 3건을, 6·25전쟁 보도의 경우 5.9건의 기사량을 보인데 반해, 진보성향의 매체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경우 현충일 관련해선 0.95건, 6·25전쟁일

지상파 3사중 KBS만 다양한 프로 일간지경우 진보매체 관심도 떨어져

엔 1.3건으로 보수 매체와 5배 가량의 차이를 보여줬다.

기사의 내용분석에 있어서는 5개 일간지 모두 그날의 의미를 조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는 하나, 집중 조명하고 기리는 기사량 분석에 있어서는 보수성향의 매체와 진보성향의 매체는 큰 차이가 났다.

현충일의 경우 의미조명에 집중한 기사가 보수·진보 비율이 17:6, 6·25전쟁일의 경우 31:6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다. 보수성향의 매체도 조선과 중앙이 보도량에서 많았던 반면 동아는 6·25관련 보도의 경우 조선의 절반에 그쳤다.

의미조명과 관련한 기사의 노출형식

도 보수성향 매체의 경우 일반기사에서 특집기획, 사설, 사진보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내용을 다뤘으나, 진보성향 매체의 경우 사진보도와 단순보도에외 없었다.

특히 한겨레신문의 경우 6·25전쟁일의 연도별로 노출된 기사건수를 확인해보니, 지난 10년 중 4년을 당일 기사 없이, 즉 최소한 ‘오늘은 6·25입니다’라는 기사하나 없이 지나갔음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주요언론의 전반적인 호국 보훈 기념일 관련, 보도 태도는 조사 대상 매체의 절반이상이 두 기념일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낮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충일과 6·25 이 두 기념일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존립에 관련된 중대한 날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가적 기념일이나 행사에 있어 계도하고 선도해야 할 언론이 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진보적 매체들의 관심도가 저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기리는 국가적 기념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언론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공정언론시민연대’의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언론매체들의 보도태도는 아쉬움이 크며 우리 언론매체들의 각성이 있길 바란다. [4]

경제활성화 과감한 유인책 펴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의 말 한 마디에 세계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락 내리락하며 요동을 친다. 우리나라 주가는 외국 어느 나라보다도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6월 19일 그동안 시행해 온 양적 완화 축소 및 중단 방침을 시사했다. 연말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내년 중반경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자 세계 각국의 주가는 물론 우리나라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이른바 버냉키 쇼크 현상이 표출된 것이다.

그러다가 7월 10일 양적 완화 축소 방침을 미룰 것을 시사하자 주가는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가는 내림세를 멈추는 듯 했을 뿐, 약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변수에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중앙은행서 통화량 직접 조절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란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을 말한다. 초저금리 상태에서 정부의 국채나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돈을 방출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정책이다.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한다. 한 나라의 양적 완화는 다른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시행되어 달러 통화량이 늘어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그렇게 되면 수출상품 가격이 내려가 그만큼 미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된다. 반면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한다. 여기서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것과는 반대로 원화가치는 상승(환율하락)한다. 미국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그 해 11월과 2009년 3월, 그리고 2010년 11월(2011년 6월 종료)등 두 차례의 양적 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그

러나 두 차례의 양적 완화는 실물경기 회복에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다. 경제 불안이 계속되자 2012년 9월 13일 연준은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이고 0% 수준의 기준금리를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기로 한다는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2년 12월 연준은 3차 양적 완화 확대 정책을 추가 발표하였다. 연준은 2013년 1월부터 매달 450억 달러의 국채를 추가 매입하여 MBS와 함께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풀어 통화공급량을 늘리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상무
·세종대 석좌교수

므로 미국 경제의 회생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신흥국의 시장 불안 요인과 경제침체에 있다. 특히 중국의 경기둔화 조짐은 적신회임에 틀림없다. 유로존의 경제도 이렇다할 호조 조짐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 어느 나라

에서 위기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다.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의 출구전략 말고도 중국, 유로 존, 여기에도 일본 경제까지 모두가 우리 경제에 낙관을 불허하는 양상이다. 일

을 던져 준다.

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도 암초

이런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복지확대, 경제민주화의 바람이 거세 이 또한 경제변수로서 경제 활성화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요컨대 복지확대나 경제민주화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경제성장정책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내일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를 잘 되게 하는 책임은 1차적으로 집권세력이 떠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야권은 말 할 것도 없고 여권마저 입으로만 서민경제니, 창조경제니 하지, 실제 하는 일을 보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안 보이고, 되는 것도 없어 보인다. 그저 국정원이 어떻고, NLL이 어떻고, 대통령 대화록 타령이나 하고 입에서 내뱉는 말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에게는 이 모든 게 전혀 관심 밖의 일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이러나 저러나 과감하게 나섰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을 부양하려면 화끈한 유인책을 써보라는 것이다. 세수 때문에 어렵고 저평가도 하지 말고 살려놓으면 세금은 늘어날 수 있다. 잘 못하는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선 법대로 엄정하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잘 하는 기업과 기업인마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부자들이 지갑을 열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도 강구하면 좋겠다. 문제는 권력이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계층에서 국민 모두에 다가가 헌신하고 상생하고 공생하려는 마음을 주어야 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와 기업인이 몇이나 있나, 라고 한다면 1%의 계층과 99% 국민과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많은 계층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정치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에서 대다수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제 1%가 아닌 99% 국민을 위해 자본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체계가 되지 않았나 싶다. [4]

대외변수 취약 장기불황 빠질우려 부동산시장등 살려야 세수도 늘어

고, 사실상의 제로금리 정책을 실행률이 6.5% 이하로 떨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2.5% 이상 오를 때까지 무기한 시행하기로 했다.

신흥국 급격한 자금 유출 비상

그동안 미국이 시행해온 양적 완화로 달러 유동성이 급증했다. 불어난 달러화는 고수익을 쫓아 우리나라 등 신흥국으로 유입됐다. 신흥국에서는 주가와 채권가격에 버블이 형성됐다. 그러나 양적 완화를 축소 중단하면 미국으로 달러가 유입돼 신흥국에서는 급격한 자금유출이 발생한다. 버냉키의 ‘축소 발언’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채권가격과 함께 주가가 동반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 같은 배경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반드시 우리 경제에 악재로만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적완화 축소는 곧 미국경제의 회복 내지는 호조를 반영하는 것이

본 경제의 경우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가치 약세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일본 경제는 잘 못 되면 물론이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청신호를 준다고 말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난감하기 짝이 없다.

문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침체로 가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데 있다. 9분기 계속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있으며 경기침체를 반영, 올 상반기 국세가 당초 목표대비 10조원이나 덜 걷혀 올 한해 20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양상이다.

새 정부의 4·11 부동산대책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듯 했지만 부동산시장은 다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준공한 지 2, 3년이 지난 신축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집이 팔리지를 않아 심각한 양상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감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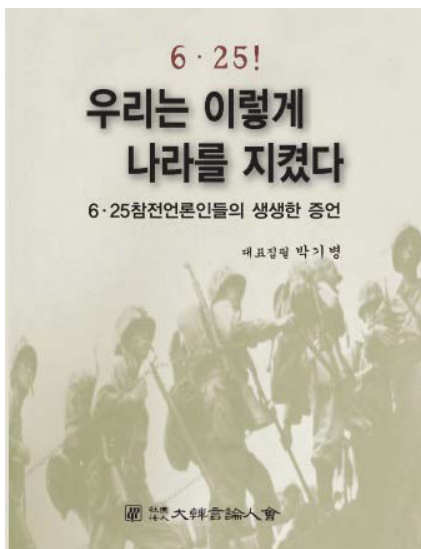
6·25참전 언론인들의 증언 출간

본회 9월 10일 출판기념회 개최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회(회장 박기병·전 강원민방 사장)는 대한언론인회 주관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4×6배판 총 389쪽·값 18,000원)를 출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원기문화팀의 지원으로 출판한 이 책은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회장을 비롯한 참전언론인(종군기자 포함) 34명이

6·25한국전쟁 참전 당시 겪은 생생한 증언과 전쟁현장을 누빈 종군기자들의 눈부신 활약상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대한언론인회는 이 책을 국방부와 전국 유명 도서관등에 무료로 기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10일 오후 5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각계인사를 초청,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책은 필자와 참석 회원들에게



무료로 증정하고 국방부 정훈교육 자료로도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필진은 다름과 같다.(괄호안은 제목)

〈참전기〉

공대식(아, 어찌 잊으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김관태(전투부대 못지 않은 역할) 김준하(꿈만 같은 ‘평양점령 작전’) 김 집(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결사 항쟁선) 김한길(17세 소년 학도병으로 다부동 낙동강 전투 참가) 박기병(생사 넘나든 백석산 전투) 송두빈

7면으로 이어집니다.

‘NLL은 영토선’ ... 알기쉽게 풀어본 설정전말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에서 대학교수도 NLL이 뭔지 모르더라는 탄식의 말이 나왔다. 필자도 지적인 모임이라고 자부하는 한 포럼에서 비슷하게 느낀 적이 있었다.

지난 7월 6일 서해 바닷가, 고향의 중학생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강의 제목을 ‘6월과 7월의 역사’로 정했다. 6월에 발생한 6·25 전쟁과 7월에 맺어진 휴전협정 이야기였고 ‘서해의 NLL문제’로 이어졌다. 중학생들에게 강의 했던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본다.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제 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항복, 해방을 얻었으나 소련군과 미군의 한반도 진주로 3·8선이 생기고 남북이 갈라진 과정, 1948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된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 그리고 공산주의 나라들이 왜 몰락했는지도 필자의 공산주의 나라 취재 경험 등을 곁들여 설명했다. 말로만 이어지는 강의는 학생들의 주의력을 끌지 못하기에 이쯤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강의 했다. ‘3·8선과 휴전선’ 그리고 ‘NLL과 북주장 해상경계선’의 지도를 함께 봤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유엔군과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제적인 전쟁이 됐고 3년간 지속됐다.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한반도의 전쟁은 치열함이 극에 달했다. 술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피 흘리며 죽었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었다. 남과 북의 경계가 동쪽은 북으로 올라갔고 서쪽은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바다는 달랐다. 중공군과 북한군의 해군력은 거의 궤멸상태였기에 협정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 유엔군 측이 서해의 거의 모든 섬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휴전협정체결 다음해 UN군 측이 해상에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NLL(북방한계선)을 선포했다. 유엔군 측이 점령했던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경계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훨씬 북쪽인 황해도의 초도와 석도, 용도 등을 그냥 북한 측에 내준 결과가 오늘의 NLL인 것이다.

지난 7월 4일 조선일보가 1면에 크게 보도한 <1953년 5월 오작도를 점령했던 우리 군, NLL 긋기 직전 ‘눈물의 철군’>이란 내용의 기사도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주었다.

밥 퍼주는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의 아버지 故 최희화씨가 남긴 사진

과 스토리를 보도한 내용이다. 6·25때 서해 섬을 거점으로 유격전을 펼쳤던 8240 부대의 부부대장이었던 최씨가 남긴 말에 따르면 백령도 보다 훨씬 북쪽이며 북한 땅이 코앞인 오작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유엔군이 NLL을 그으면서 남쪽인 대청도로 철수하라고 지시하자 부대원들이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전 KBS LA특파원
·언론재단 특임강사

이 해상 경계선을 인정하고 지켜왔다. 그러다가 1973년 NLL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1999년 9월에 인민군 총참모부가 휴전선에서 서남쪽으로 연결하는 서해 해상 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NLL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해상경계선을 내세우면서 황

했다. 중학생들이 대학교수도 모른다는 NLL을 쉽게 이해했고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를 걱정해야 하는 일은 없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였다.

강의 다음날인 7월7일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지 4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경제발전과 남북 경제력 비교 얘기도 했다.

보릿고개를 어렵게 넘었던 나라가 부자가 됐고 지금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훌륭한 나라가 됐다는 얘기도 나눴다. 그리고 노력해서 자랑스런 세계인이 되자는 다짐으로 강의를 마쳤다. 승용차를 운전하며 귀가하는 길, 머릿속에 다시 NLL 파도가 밀려왔다.

NLL을 부정하는 것은 휴전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영해인 바다도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선이 아니라는 말은 미친 소리인 것이다. 논란이 되는 NLL문제는 분명히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고 다짐하면 된다. 그런데 일부 세력이 안개를 뿌리고 일부러 어지럽게 포장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니 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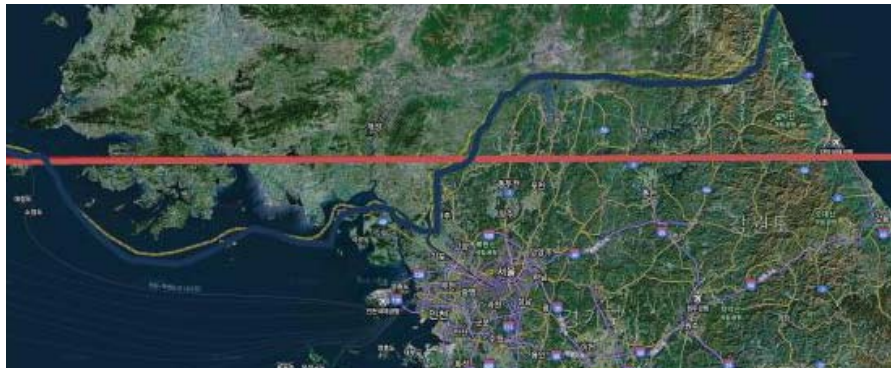
6월 26일자 유력 일간지 머리기사에서 대통령후보였던 사람이 “NLL 협력 구상이 훌륭하지 않나”라고 했던 내용이 다시 생각났다. 그게 가능하다면 훌륭한 정도가 아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도 남을 엄청난 일일 것이다. 역사의 한 장을 크게 장식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이 마비된 사람들의 꿈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이왕 꿈을 꾸려면 더 큰 꿈을 꾸라고 권하고 싶다. NLL 해역을 평화지대로 활용한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NLL로 국한 시키지 말고 휴전선 전체를 남북 평화지대로 만드는 꿈을 꾸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통일이 되는 것인데, 통일이 이리 쉬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다고 해야 할 모양이다. 유행가 가사 한토막이 생각났다. “바보야 문제는 현실이야.”로 바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그리고 NLL을 둘러싸고 무슨 법이 어떻고 누가 어쨌고 하는 등등의 소모적인 다툼은 접어야 한다. 모두가 솔직해야 하고 진실을 무서워해야 한다.

역사가 심판할 일이다. 결론이다. NLL이란 영토선은 현실이며 실존이다. 모든 일은 사실과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진실을 담아야 한다. NLL을 괴물이라고 말한 이도 있었고 NLL을 유령 같다고 하는 이도 있지만 그들이 괴물이며 유령인 것이다. [4]

3·8선과 휴전선 지도



UN군측서 北에 크게 양보한 선 중북세력 北주장 동조는 코미디

“전우들의 피로 사수한 섬들을 이렇게 그냥 내줄 수 없다며 통곡했다”는 것이다.

최희화씨 부대가 점령했던 오작도는 황해도 해안에서 1.5km정도 떨어진 섬으로 북한 땅의 바로 턱밑이었다. 유엔군이 당시 점령하고 있던 섬들을 모두 고수했다면 북한의 항구들은 상당수가 봉쇄당했을 것이다. 당시 이승만 정권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경계선이었고 북한으로선 고마웠을 일이다. 북한은

썬 북쪽에 위치한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의 통행은 해상에 회랑 형태의 해역을 정해 보장한다는 코미디 같은 제안을 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중북인사 등이 북한 주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지고 있다. NLL은 6·25 전쟁이 휴전하면서 UN 측이 양보해서 태어난 해상 경계선이다. 해상 휴전선이다.

2시간여 동안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과 주고받은 말들이 나를 기쁘게

6면에서 이어집니다.

(17살 소년병으로 최전방 배치) 안광식(해병중위로 서해안을 사수하다) 안현태(아! 전쟁은 정말 참혹 했다) 오판룡(누가 6·25를 모른다 하는가) 유승택(철도 지키는 특공대에서 공군헌병이 되다) 윤양중(해병대와 나, 삽화 5제)

이경남(나의 6·25 ‘질풍노도시대’) 이구열(김화지구전투서 포병 관측장교로) 이도형(군번 0183900 육군이등병에서 군번 225581 육군중위로) 이세환(조국을 지키는 길은 자원입대) 이순기(암야에 백병전, 그리고 해공첩보전) 이종식(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지용우(안강전투에서 구사일생)

최창봉(나의 6·25 참전기) 홍성혁(통신병으로 OK!) 황대연(아! 참담했던 6·25한국전쟁)

〈중군기〉
구본건(잊지 못할 문산 탈환의 감격) 김진섭(적도<敵都>) 평양이 무너지던 날) 박성환(생사<生死> 넘나든 6·25중

군 취재) 이지웅(아 어찌 잊으랴! 6·25 한국전쟁) 이필면(인천상륙작전 성공시킨 육군17연대) 이해복(‘국군 평양 탈환’ 전과 특종보도) 임학수(‘포탄세례 뚫고 특종전쟁’) 지갑중(로이터 통신기자로 종군하다) 최원각(6·25 그 참상을 아는가) 한영섭(6·25를 종군한 유일한 방송기자) [4]

“김영란法 원안대로 가라” 한목소리

우리나라 최대의 과제인 공직부패 추방을 위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재임 시절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정부수정을 거치며 원안에서 한참 후퇴하자 좌·우파 모든 신문들이 ‘원안을 고수하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념을 떠나서 씩을 대로 씩은 공직부패가 우리나라 발전을 쇠고랑처럼 잡고 있다는 신문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표출한 것이다.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를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 향응 수수 등 표면으로 드러난 공직사회 부패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다. 기업인과 자영업자 80% 이상은 업무 처리상 ‘떡값’과 ‘존지’ 관행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패 실태 연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대가성이 없다는 해괴한 이론으로 법망을 피하는 작태에 국민과 언론은 신물이 난 것이다.

“누더기 주범은 법무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8번째로 부패한 나라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107개국 11만 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조사자의 절반이상은 정부들이 부패와 싸우는 데 무능하다고 보았다. 조선일보는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겠다면 김영란법 원안대로 가라’(7월5일), 문화일보는 ‘김영란법은 공직보호법. 총리실 안으로 후퇴말라’, 한겨레는 ‘김영란법 중재안으로는 공직부패 근절 못해’, 중앙일보는 ‘부패근절 김영란법 정신 흐트러선 안된다’(7월5일), 서울신문은 ‘용두사미 김영란법 공직부패 척결되겠나’(6월26일), 세계일보는 ‘속빈 강정된 김영란법은 필요없다’(7월1일), ‘잇단 부패상보고도 김영란법에 구멍 만드나’(7월7일)라고 원안 수정을 질타했다. 매일신문은 ‘누더기 김영란법 주범 법무부 권익위’라고 공격했다.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후신인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권익위가 마련한 법안 원안의 핵심은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예외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 금품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법안소절 과정에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저항했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서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직위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한 금품 수수는 대가와 관계 없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원안에서 후퇴했다. 쉽게 말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형사 불벌’이다. 촛지는 먹고 싶지만 형사소추 되기는 싫

다는 속셈이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다. 공직 사회의 부패 근절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문화일보는 4일 사설에서 “공직자라면 누구의 어떤 돈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선명한 선언, 이것이 국가가 최종 정리할 김영란법의 본령이다”고 적시했다. 한겨레는 5일 사설에서 “법무부는

정부 수정안은 속빈 강정에 불과 ‘공직자부패 수사처’ 신설 촉구해야

과잉금지 운운했으나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이유 없이 공직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김영란법의 원안대로 만들더라도, 받은 돈이 직무와 무관한 다른 이유에 따른 것이었음을 공직자가 명백히 입증할 경우 면책되도록 한다면 과잉금지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 중재안보다는 원안이 훨씬 낫다”라고 썼다. 세계일보는 7월1일 사설에서 “‘갑 중의 갑’인 공무원이 스스로 채찍질을 자정하며 자정을 다짐할 때 다른 분야도 저절로 맑아진다”고 지적했다.

“누구의 어떤 돈도 받지 말라”

김영란법의 목표는 ‘대가성 없이 공직자를 후원한 사람이 언젠가 그 공직자의 도움을 나중에 요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떻게 법이 판단할 수 있겠는가?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아예 100만 원이상의 금전 거래 자체를 불법화하자’는 것이다. 이 법의 존재로 뇌물을 요구받은 시민이나 청탁을 거절하고 싶은 공직자 모두가 이 법을 언급하며 금품수수를 원천봉쇄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검사출신인 정홍원 국무총리가 나서 조정했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없음에도 사실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는 ‘현재 관례에 수수한 금품과 직무행위와의 관련성 또는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2010년 일명 공직자의 스폰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식사와 술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향응수수가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2009년에는 외국 국적 선사의 선박운항허가와 관련해 8000만 원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은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수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부패도가 높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의 공직사회, 정치권 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176개국 중 45위에 그쳤다. 싱가포르의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뜻이 있었던 것만 드러나도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하며 부정축재는 몰수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은 2009

조건이 떨어져 있다. 뇌물이나 청탁을 받고 부정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 부패는 모든 사회부패의 직·간접적 원인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부활시키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의 ‘누더기된 김영란법 이럴 거면 왜 만드나’란 사설에서 “‘검사 스폰서’ 사건에서 드러났듯 공무원이 돈을 받아도 직무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현실을 바로잡아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의도였다. 부정부패만 줄여도 성장률이 연평균 0.65% 추가 상승한다는 연구도 있다.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앙의 7월5일 사설은 “공직자는 어떤 돈도 받아선 안 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지 않는 한 공정사회도, 일류국가도 요원하다. 그 중요한 입법이 부처 간 절충으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썼다.

세계일보는 “공무원의 금품 수수를 주차위반이나 물리는 과태료로 다스리겠다는 법안은 바닷물만 살 뿐이다. 그런 법은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정치권이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기 싫다면 과거의 공약이라도 지켜야 한다.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한 대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공직부패수사처를 만들라고 신문들이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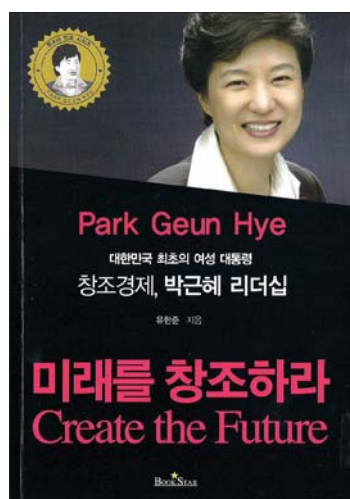
회우들이 펴낸 신간

유한준 회우 ‘박근혜 리더십’

유한준 회우(본회 후생복지위원·아동문학가)가 <박근혜 리더십>을 펴냈다. 이 책은 ‘미래를 창조하라’는 부제 아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큰 꿈을 키워라’, ‘위기관리의 거인’, ‘불멸의 리더십’, ‘하늘의 뜻’ 등 7부로 나눠 33가지 이야기를 담고, 이야기마다 Point를 달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리더십으로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고 준비하는 생산적인 리더십,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철인정치, ▶위기를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대처하는 불굴의 집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명이 바치겠다는 위국충정의 리더십 등을 10가지를 꼽았다.

저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마저 총탄에 여의고 ‘독재자의 딸’이라는 냉소를 받으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수첩공주’ ‘철의



여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이겨내고 불굴의 집념과 노력으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꿈이 한창 피어오르던 프랑스 유학시절, 비명에 간 어머니를 대신하여 퍼스트레이디로 아버지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정치 감각을 익히고 다져,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자애로운 대통령으로서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처녀 대통령, 父女의 代를 이은 대통령, 세계화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감각과 리더십을 지닌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고 기술하였다. [K]

‘KBS TV비평’ 정치적 의도 의심

KBS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하는 ‘TV비평 시청자 데스크’로 한동안 내부적으로 시끄러웠다.

지난 6월 22일 제 522회 방송 때문이었다. TV비평 시청자 데스크(이하 시청자 데스크) 프로그램은 옴부즈맨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 KBS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소감이나 의견과 제안을 방송을 통해 펼치는 방송법에 의한 의무 편성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을 소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네 파트로 구성되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우선 KBS 프로그램에 대한 주간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시청자의 눈’과 KBS에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송가 핫 이슈에 대해 현장취재, 심층 분석해보는 ‘클로즈업 TV’가 있다.

다음은 시청자가 KBS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을 찾아가 방송제작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제작 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제작 현장 속으로’가 방송된다.

네 번째는 ‘TV를 말 한다’로 대중문화 평론가, 미디어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원을 통해 방송과 대중문화, 미디어 교육 등 폭넓은 주제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있다. 현재 진행은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정재민 교수와 정은승 여자 아나운서가 맡고 이미경, 현상윤, 최태엽, 홍성욱 PD가 제작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방송 특히 국민의 방송이란 이름의 대표 공영방송 KBS로서는 국민과 방송에 대해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과 알 권리를 제대로 파악해서 방송에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때문에 옴부즈맨 프로그램으로 의무적으로 제작, 방송되는 프로그램이고 이 옴부즈맨 프로그램은 비단 공영방송 KBS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가 꼭 편성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영방송노조서 문제제기

문제의 발단은 6월 22일 방송된 시청자 데스크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의 전말과 원세훈 전 원장의 기소에 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KBS 뉴스 9의 보도가 대단히 미흡했다는 지적과 비판 끝에 이런 경우 으레껏 결론짓는 공영방송의 확립을 위한 사장 인선 제도 개혁문제 등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결론지는데 대해 사내 ‘공영방송노조’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데서 비롯됐다.

공영노조는 시청자 데스크가 “애당초 객관적 비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향된 인물을 내세워 이례적으로 평소 다루지 않던 보도본부의 뉴스 9을 일방적으로 비판한 것은 제작진의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계적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객관적 장치조차 확보하지 않는 이 프로그램이 아무런 여과 없이 전파를 타고

방송된 것으로 보아 KBS의 게이트 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미디어 비평지에 따르면 제작자는 출연자인 성공회 대학 신방과 김서중 교수와 미디어 평론가 민동기씨 등은 미디어 전문인들로서 과거에도 KBS에 출연했던 인물들로 편향성 논란은 있을 수 없다며 비판을 일축했

방송시평



오건환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충실한 보도와 분석이 아쉽다는 점을 느끼고 타 매체나 방송과 비교해 보기도 했는데 이는 비판 필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 아쉬워하고 KBS를 질책하는 점이라고 분명히 짚을 수 있다.

그러나 비평자는 우선 자신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프로그램 제작에 앞서야 한다.

뉴스9 비판 끝 사장인선제도 거론 “미디어 전문가들 출연” 공색한 반박

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비평의 균형성에 관해서는 9시 뉴스가 국정원 관련 뉴스 보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선적이라면서 한겨레나 뉴스타파 등 인터넷 방송보다도 잘못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평소 다루지 않던 뉴스 9을 다룬 것에 대해 시청자 데스크가 방송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청자 위원의 판단이 필요할 뿐 심의실이나 경영진이 강제할 사안이 아니며 시청자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특히 KBS의 시사보도가 출세에 눈이 먼 간부진 몇몇에 의해 망가졌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비평’ 편향성 너무심해

이 문제를 접하고 필자는 지난 날 참여정부 시절 ‘미디어 비평’이란 프로그램에서 KBS가 거의 황포에 이를 만큼 비평도 아닌 비평으로 모든 주류 언론에 칼을 휘둘러 국민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일이 생각나 이 기회에 미디어 비평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 다소 장황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당시에도 전문가란 편향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출연해 정치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제작했다는 것은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각 방송사의 유사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주로 주류 보수 언론, 구체적으로 이른바 조중동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까지 서슴지 않았던 쓴 기억이 있다.

이번 시청자 데스크의 논란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양상으로 도출되고 있어 매체 비평이란 말이 해당되는지 회의가 든다.

필자도 이 프로그램이 지적한대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 대해 KBS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권력에 의한 국민 주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한

그런 면에서 이번 시청자 데스크 제작자는 매체 비평을 다루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란 생각마저 든다.

무엇보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도 남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남에 대한 비판이 정당성을 갖게 되지 자신의 오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는 비판이 결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기자도 ‘전문가’ 포장 출연

우선 출연자들이 관련 학회장 등 공인된 미디어 비평 전문가들이라는 점을 들어 편파적이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논리의 기본도 모르는 얘기이며 전문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그 사람의 생각과 언행, 주장이 어떤지를 판단해서 출연자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전문가란 것만으로 출연시킨다는 것은 제작자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미디어 전문가라고 이름을 달고 나온 또 한 사람의 출연자는 평소 주류 언론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공을 들이는 ‘미디어 오늘’의 미디어 담당 기자인데 굳이 미디어 전문가란 이름을 달아 출연시킨 것은 다분히 ‘미디어 오늘’ 기자임을 숨겨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제작자로서 아쉬워 해야 할 것은 방송 중 김서중 교수가 “아까 민동기 기자님도 말했지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말을 이어가 제작자가 그렇게 공들여 만든 전문가를 기자로 격하(?)시키는 실수를 범해 제작자의 의도를 간과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아닐까?

또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다면 노영란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와 ‘언론민주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을 통해 KBS 뉴스 9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는 혹독한 비판을 함으로써 두 출

연자가 차마 못 다한 말을 대신 하게 했는데 비판의 내용이 정당하기는 해도 이들 시민단체가 평소에 진보적 언론관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편향적 출연자 선정이라는 지적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방송평이란 지면을 메우고 있는 필자도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한쪽에 서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고 평소에 내가 서 있는 입장이 무엇이든 적어도 이 지면만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런 면에서 시청자 데스크가 KBS 뉴스 9을 다룬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지적 사항이나 비판의 구체적 사례도 KBS를 위해서 올바른 것이었고 아픈 매질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국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방송 KBS가 되기 위해서 사내 모니터링 제도 강화나 시사, 탐사 보도의 지원과 심층 보도의 강화 등 원론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한 점 등은 백번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고 그런 면에서 이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KBS 내부에서 또 편 가르기 등의 행태가 나타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KBS의 시사보도가 출세에 눈이 먼 간부진 몇몇에 의해 망가졌다”는 제작자의 주장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믿지 않으면서도 상투적이다시피한 결론에서 두 출연자가 공통으로 내 놓은 정치적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현 KBS 경영진 선정 방식이 역으로 제작자의 숨은 정치적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작과정 시스템 점검안해

가장 아쉬운 점은 나름대로 열심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비판을 하면서도 보도국의 뉴스 제작자나 취재 기자, 편집자를 통해 왜 KBS 뉴스 9이 ‘TV비평 시청자 데스크’가 지적한대로 이런 중요한 뉴스를 축소(?)보도했는지, 왜 부실하게 보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는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지 않고 취재, 제작 과정의 시스템 등을 점검하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제작자의 제작의도와 내용에 대한 합리적 주장에 쉽게 수긍할 수 없고 그 속내의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연유이다.

다시 한 번 다짐하는데 미디어 비평에서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객관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란 점을, 그런 연후에야 시청자는 비평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점을 되새겨 본다. [필자]

녹슬지 않은 老記者의 펜 … 8순에 ‘그

날마다 환생하며 “땡땡땡”

지루한 장맛비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겹게 내리던 지난달 11일 오후 3시. 당산역 9번 출구 앞에서 본회 金珍培 회우를 만났다. 해바라기 꽃무늬가 해맑게 웃는 남방 차림이다. 아파트는 지하철역과 지척의 거리다. 반갑게 맞이하는 안주인은 단아하고 젊어 보인다. 거실은 기억자 벽면을 가득채운 서가,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놓인 책상, 일자형 소파가 놓여 비좁다.

한 쪽 벽 작은 액자에 미소를 머금은 스님의 캐리커처 아래 주민등록 번호와 비슷한 숫자가 새겨져있다. 340409-150801. 주민등록 앞자리 숫자와 죽음을 예상한 날짜를 조합한 명패(命牌)다. ‘인사 차리다 언제 공부하나. 하루 8시간 이상! 8당 6락이다. 헌법 이야기를 즐겨라. 책과 인터뷰, PC앞에 기쁘게 몸을 던져라. 팔순을 맞는 네가 다 집한 성스러운 의무다. 1912. 9. 4 중암(호)’이라 쓴 쪽지를 붙여놓았다.

1934년에 태어났으니 우리나라로 여든. 예상대로라면 2년 뒤엔 이성을 하직한다. 명패 아래에는 선덕여왕신종을 본뜬 작은 종과 나무망치가 놓였다. 탁상용 캘린더에는 사인펜으로 날짜마다 동그라미(O)와 가위표(X) 표시를 해놓았다. 7월 첫날만 가위표고 전부 동그라미다. 하루 8시간 공부하면 성공한 날, 6시간이면 실패로 판단한 일일평가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도 무사히 지냈다”며 종을 땡땡땡 세 번 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다시 환생 했다”는 의미로 땡땡땡 종을 세 번 치며 하루를 연다.

-명패를 만든 동기는?

“3년 전 폐암 수술을 했어요. 왼쪽 폐를 4cm 잘라냈죠. 그 뒤 명패를 만들었어요. 과거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과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도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문하며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 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며 삽니다.” 수술 후 삶의 애착 보다 삶을 관조하게 된 철학적 사유를 차분하게 설파한다. 초탈의 경지다. 부처와 예수는 동경의 대상일 뿐 종교는 없다고 한다.

헌법 수난-이면사 그려

-근황은?

“2년 전 관훈클럽의 저술지원을 받아 집필한 원고를 최근에 탈고하여 출판사에 넘겼어요. 8월 5일 출간 예정입니다.

-제목은?

“‘김진배의 헌법이야기’라고 부제를 붙인 ‘그놈의 헌법’입니다.”

-제목이 시니컬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뤘습니다. 헌법을 지키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하는 사람은 대통령뿐입니다. 그들이 앞장서 헌법을 파괴한 것이 아이러니컬하죠. 역대 대통령의 공과와는 별도로 권력자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61)

회우초대석

金珍培

인터뷰 : 글·사진



김진배 회우는 3년 전 폐암 수술을 받았으나 건강을 되찾아 ‘비움의 삶’을 살며 저서 출간을 앞두고 있다.

언론계 22년 … 국회의원 2선 … 취재·저술활동 손 3년전 폐암수술 … ‘죽음命牌’ 앞에 놓고 하루 8

들이 집권 연장을 위해 궤도를 이탈한 헌법의 수난사이자 열륙진 이면사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법의 어머니가 헌법인데, 국민들은 헌법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거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이 거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즉 국가권력은 강제력이 있지만 권리보장은 사후적 이어서 강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내면 압류를 하지만 국민들의 권리나 피해보상은 요구를 해야 반영됩니다.” 차분하고 조리 있게 말을 잇는다. “헌법이 권력자나 특권층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보호자가 될 때 헌법은 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1948년 헌법 제정이후 9번에 걸친 개헌 가운데 7번이 집권연장을 위한 개헌이다. 이승만 정권의 ‘발체개헌’과 ‘사사오입개헌은’ 불행의 씨앗이 되어 하야 후 망명길에 오른다. 군사정부도 집

권연장을 위해 헌법을 고쳤다. ‘유신헌법’과 ‘간선제 대통령 7년 단임’은 헌법이 국민의 편이 아닌 권력자의 편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개헌은 4·19혁명 후 과도정부를 거쳐 1960년 제2공화국의 토대가 된 제3차 개헌과 1987년 6월 항쟁이 일구어 낸 현행헌법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헌이다.

-여든 살인 올해 8월, 저서가 출간 된 것은 노 기자의 펜은 아직도 녹슬지 않았음을 보여 줘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바탕으로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현장감을 살리려고 힘썼습니다.” 단순한 헌법의 통사가 아니라 누구나 실증적으로 알 수 있게 기술하여 현대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게 출판사 측의 설명이다.



김진배 회우가 2007년 에베레스트 5,400m 베이스캠프고 있다.

‘외톨박이 언론인’으로 기고

-언론계 22년, 국회의원 2선 8년, 바쁜 게 산 기간에도 꾸준히 저술활동을 하셨군요.

“지금도 취재를 위해 카메라와 녹음

고놈의 헌법' 출간

· 전 동아일보 기획부장, 경향신문 논설위원
· 제 11, 15대 국회의원
· 자유기고가

사진 =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기를 챙겨 사람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어요. 건강이 허락하면 헌법이야기를 시리즈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그는 역저 ‘백성의 권리’(1960년), ‘비화 제1공화국’(1975년), 칼럼과 취재기를 담은 ‘당신들의 아픔을’(1978년),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전기(1984년), 김대중 자서전 ‘인동초의 새벽’(1987년)을 비롯하여 ‘권력의 암부’, ‘선거로 본 해방 40년’, ‘개헌의 역학’, 수십 편의 정치관계 논문과 인물평, 논픽션 등을 펴내며 왕성한 집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어디에선가 스스로를 ‘외톨박이 언론인’이라고 했던데요?

“11대 국회의원(부안·김제) 임기를 끝내고 12대 총선에서 떨어진 뒤 살길이 막막했어요.

1987년 말 20여 년 살던 국민주택을 웅자 은행보증 잘못서 송두리째 날리고 집도 절도 없고 생활비도 없었죠. 언론계를 찾아다니며 기고를 제안해도 ‘DJ맨’이라고 기피했어요. 연구도 인연도 없는 ‘월간 조선’ 차장이 만나자고 하더니 ‘장면 민주당 정권 8개월’을 100장 쓰라고 하더군요.”

그는 반갑지만 발행인이나 편집인 확답 없이 써도 되겠느냐고 확인했다. 게재되지 못하더라도 원고료는 1장에 5,000원씩 주겠다고 해 써 넘겼다. 방우영 사장도 “내용과 글이 좋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우편환으로 부쳐온 원고료는 세금 떼고 102만원. 그 뒤 매달

명, 60대 1이다. 고대 법과 동기인 여영무를 비롯하여, 신광일, 정태경, 임판호, 조규진 등이다. 수습기자 때 교정부 말석에서 원고를 보던 중 한창우 사장이 편집국에 들러 “견습기자 김진배 어디있나?” 우렁찬 목소리로 그를 찾았다. “이 놈이 논문 1등이라고? 정치부장(송원영) 소원대로 정치부에서 견습을 시키시오”한다. 출발은 좋았다. 입사 4개월 만인 1959년 4월 30일 자유당 정권에 의해 폐간되는 불운을 맞았다. 전 북일보와 세계통신에서 답답한 세월을 잠시 보냈다. 정간된 지 361일 만인 1960년 4월 27일 복간됐다. 인찰지에 목지를 대고 골피로 쓴 대법원 복간 판결문을 정리해 넘기며 활자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JP 정계은퇴 특종, ‘借款필화’ 곤욕
-1963년 동아일보로 옮긴 계기는?

“제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동아일보 김성열 정경부장이 소공동 경향신문 앞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해 나갔더니 함께 일하자고 제의했어요. 내 기사 잘 보고 있으며 보너스가 더 많다는 조건에 솔깃했죠. 선거 끝난 뒤 가겠다고 했으나 당장 오라고 해 대통령선거를 며칠 앞두고 동아일보 정치부로 옮겨졌지요”

동아일보도 영욕의 세월이었다. 1968년 5월 30일 ‘JP 정계은퇴’ 특종을 했다. ‘김종필씨 공화당 탈당’ 특호 활자에 ‘의원직 등 모든 공직 사퇴, 국민복지회사건과 관련 있는 듯, 본사 기자 단독 회견’이 부제로 나갔다. 신문사에서 특종상을 받았고, 기자회견 기자상(제2회)을 수상했다. 국회팀장인 그가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3주일 동안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그해 11월 25일 김포공항 비행장 트랩 밑에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산’으로 호송됐다. 1968년 ‘신동아’ 12월호에 특집으로 실린 차관(借款)기사(김진배·박창래 공동집필)가 문제가 된 것을 안 것은 다음날 새벽이다.

“차관도입에 따른 커미션의 출처와 분배방식 등 누가 자료를 제공했는지 출처만 대면 당신은 죄가 없다”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 10여일 곤욕을 치렀다. 후유증은 컸다. 연행자는 공동집필자인 박창래 기자를 비롯한 10여 명. 신동아 주간 홍승면씨와 손세일 부장은 ‘차관 사건’으로 다뤄지다가 ‘북괴와 중소분쟁’이라는 외부 기고를 빌미로 구속 수감되고 사표를 구치소에서 받아갔다. 동아 발행인은 김상만 부사장장에서 고재욱 사장으로 바뀌었고, 천관우 주필을 해임시켰다. 김 회우는 ‘동아연감’을 만들던 출판부 차장으로 전보되어 사표를 내고 보름 간 출근하지 않았다.

그 뒤 편집국 기사 기획과 광고 판매 등을 조율하던 기획부장을 끝으로 1975년 동아 언론자유투쟁으로 해직됐으나 ‘동아투위’ 멤버는 아니었다. 해직되고 살길이 막막했다. 1959년 경향 폐간 때는 혈기왕성한 스물다섯 살이지만, 75년 동아해직 때는 마흔 두 살. 노모와 처, 그리고 삼남매(2남1녀), 여름이라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⑮

인지능력 향상법



이광영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최근 이에 대한 두 가지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관심을 끈다.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데보라 바네스(Deborah Barnes)교수 팀의 연구로 운동과 정신적 자극이 고령자들의 감각과 판단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토론토 대학 라자 낙비(Raza Naqvi) 노인학 교수로 고령자들이 십자 말풀이만 해도 노화로 인한 능력감퇴나 기억력 소실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이다.

바네스 교수 팀은 65세 이상(평균 연령 73세)된 126명을 4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 간 1주일에 3일을 하루에 1시간씩 육체 및 정신적 자극을 주었다. 한 그룹은 가장 강력한 자극인 뇌 훈련을 위한 컴퓨터 게임과 에어로빅을 하게 하였고 나머지는 대조군으로 하여 예술, 역사 그리고 과학 등의 교육적인 DVD를 관람하게 하면서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전에 기억력과 사고력의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연구가 끝날 때에는 전체 그룹에서 모두

기억력과 사고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비 교수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발표된 연구 논문 32편을 종합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컴퓨터를 통한 뇌 훈련 프로그램, 강도 높은 개별 훈련 등을 통해 기억력이 크게 향상

되고 주의력과 청력도 많이 좋아졌음을 확인했다.

은행 앞, 비타민, DHEA(dehydroepiandrosterone) 그리고 기타 여러 보충제의 복용효과를 측정한 것도 있었으나 효과를 증명할 수 없었다고 했다. DHEA는 노화방지 등 각종 질병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충제이다. 또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오히려 뇌기능의 저하와 치매와 관련이 있었다고 했다.

낙비 교수는 이번 연구로 임상 의들은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의 감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십자 말풀이나 소도쿠(1-9의 숫자를 겹치지 않도록 적어 넣는 단순한 게임)와 같은 쉽게 할 수 있는 뇌운동이 실제로 인지기능의 감퇴를 줄일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연구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본문]

연탄격정을 털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 해 친정인 경향신문에서 오라고 해 논설위원과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끝으로 22년간의 언론계를 마감한다.

고향서 야당의원 두 번 당선

-정계 입문은?

“1980년 다방에서 민주한국당(민한당) 창당 준비를 하던 유치송(柳致松)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기에 놓고 있다고 했죠. 부안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출마하라고 해서 11대 국회의원에 당선 됐습니다. 민한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당 대변인을 지냈으나 12대 총선 때는 고배를 마셨죠.”

-1996년 15대 총선 때는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으로 당선됐지요?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 1987년 대선 때는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 선전본부장을 맡았어요. 집사람이 보라매공원 김대중 집회에 나오다 버스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집까지 날려 공황상태였어요. 이듬해 DJ가 공천 제의를 했으나 경황도 없고 기운이 빠져 사양했지요. 12년 놀다보니 국회의원을 다시하고 싶어 공천해달라고 하니 하랄 때는 안한 다더니 나 혼자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난

색을 표하다가 공천을 받게 돼 재선으로 활동 했습니다” 15대를 끝으로 탈당하고 정계를 은퇴했다. 그 뒤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을 지냈다. 양재동 15층 사옥은 사장 재임 중 준공했다.

부인(신형순)이 타계한지 3년, 1990년 장정숙 씨와 재혼했다. 새로 맞은 부인은 14세 연하로 초혼이다. 진명여고를 나와 진명여고 행정실에서만 38년 근무했다. 올진이 고향으로 ‘영호남의 결합’이라며 웃는다. 단아하고 젊은 모습의 의문이 풀렸다. “살림살이와 집필 뒷바라지를 해주는 집사람이 시종여일 고맙다”고 한다.

산을 좋아하는 김 회우는 1955년 고대산악회 결성에 앞장섰고, 한국산악회 자문위원과 평생회원으로 ‘2007 한국 에베레스트 실버 원정대’ 산파역을 맡았다. 60대 산악인 2명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8,848m)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고, 김 회우는 부인과 함께 5400m 베이스캠프까지 올랐다.

귀가 약간 멀어 불편할 뿐 폐암 수술 이후 복용하는 약 없이 건강을 유지한다. 인터뷰를 마친 뒤 약속이 있다며 가파른 지하철 계단을 가뿐하게 올라간다. [본문]

농은적 없어 3시간씩 공부



를 오르

120장씩 1년간 기고했다. 5개월 쓰거나니 다른 시사 월간지에서 원고청탁이 들어 왔으나 쓸 여력이 없었다. 새로 창간되는 신문사에서 사장 주필 제의도 있었으나 사양했다. 조직에 얽매이면 펜은 제약당하기 때문이다. 1992년까지 3~4년간 자유기고가로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시절을 ‘외톨박이 언론인’이라 자칭했다.

-경향신문 수습 2기시죠?

“대학(고려대학교 법과) 3학년 때 고등고시 사법과(8회)를 봤어요. 두 번은 안보겠다고 다짐하며 꼭 붙을 것이라 확신했는데 낙방했어요. 겨우 5명인가 6명인가 합격해 정나미가 떨어졌죠. 졸업하던 1958년 경향신문기자 시험을 쳤어요. 대학을 졸업해도 막상 갈 곳이 별로 없던 시절 운 좋게 붙어 이듬해 1월 2일 첫 출근 했습니다.”

응모자 367명 가운데 최종합격자는 6

別種의 인간들과 마주쳤던 판문점

취재여화

1960년대 중반부터 나는 판문점을 드나들었다. 1972년 여름 彼我(피아)의 군인들끼리 만나 舌戰을 벌이던 양철지붕의 회담장에서 남북의 적십자회담이 열리기 시작 하면서 나의 판문점 출입은 막을 내렸다. ‘출입’이라고 하지만 한 달에 한두번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MAC) 본회의(속칭 MAC Meeting)가 열릴때만 지루하기 짝이 없는 설전을 취재하러 그곳엘 갔다.

설전은 회담장 안팎에서 벌어졌다. 회담장 안에서는 군사문제(북측은 정치선전을 주로 했지만) 주로 비무장지대(DMZ)내에서의 정전협정 위반사항을 다루었고 밖에서는 남북의 기자들이 정치체제 논쟁을 벌였다. 우리는 왼팔에 'PRESS', 저쪽은 '보도'라는 완장을 달았다.

처음 만날 때는 서로 아주 점잖게 인사를 나눈다. 회담장 안에서는 악수나 인사도 없이 본회의를 소집한 쪽이 대뜸 발언을 시작한다. 그러나 밖에서는 악수도 하고 修人事도 한다. 우리는 그저 취재가 목적이지만 저쪽에서는 판문점은 선전장이요, 정보수집장이며 대남공작장이기도 하다. 그들의 수법은 이쪽의 처음 나오는 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겁을 주는 것이다. 내가 처음 나갔을때 저쪽에서 카메라를 들고 반가이 다가온 40대 후반의 늙수구레한 ‘보도일꾼’이 “리선생 반갑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놀란 기색을 안보이고 그저 웃고만 있었다. 부인한다는건 못한 짓이다. 그는 이어 “아기들은 잘 자람니까?” 내가 가만히 있자 “딸만 셋이라고 들었는데...” 漸入佳境이다.

그는 처음 보는 나의 성격까지 알았다.

“아아 리선생같이 열정적인 반공투사는 공산주의를 이해하고 우리 편으로 오게되면 누구보다도 열성당원이 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서 그는 공산주의자로 전향한 야나기(?) 모라는 사람의 저서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 후 그는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며 설득했다. 대체로 만나면 인사가 끝나자마자 설전을 벌이곤 하는데 나를 잘 아는 40대 후반 (나는 그에 관한 정보가 없었다) 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김일성 체제를 늘 자랑



이도형

·본회 회우
·한국 난단 발행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경제지표가 북한이 우월했다. 나는 말 끝에 “당신네 체제가 우월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해방후 지금까지 5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좋은 체제를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쳐 살고 있는 까요” 라고 했다. 나는 그의 말문이

막힐 줄 알았다. 그러나 웬걸 그는 남쪽 임진강쪽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5백만 아니라 5천만이라도 인간 쓰레들은 가도 좋소” 그의 말투는 당당했다.

나는 되물었다. “어째서 월남 동포들이 인간쓰레기란 말이요?” 하자 그는 “혁명의 대열에서 나오된 자는 인간 쓰레기요” 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월남 동포들과 그 가족들은 적대계층이다. 1,500만~2,000만명은 된다. 그 ‘인간 쓰레기’ 중 가끔 100명을 골라 남쪽의 월남동포를 만나게 한다. “우리는 장군님 덕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말 훈련을 시켜서.

직경 800m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JSA)은 영화 JSA 같은 젊음의 낭만이 있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인간과 비인간, 평화와 혁명, 말과 폭력이 겹보기에 그럴듯 하게 공존하는 기이한 곳이다. 그곳에는 우리와는 별종의 인간들이 一觸即發之態勢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언제 폭발할지 모를 活火山의 噴火口 같은 곳이다.

거기서 그들은 태권도로 미군을 때려 눕히고 도끼로 미군장교를 때려 죽였다. 그래도 우리는 참아 왔다. MAC본회의가 4백여차례 열려도, ‘평화’를 가정한 북면의 노동당원들과 수없는 대화를 벌였어도 그곳은 60년째 변함없는 非情, 非人間的의 非武裝지대일 뿐이다.

그나마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던 (북측보도일꾼들은 남쪽으로 오지 않았지만) JSA는 1976년 8·18 도끼만 행사건후 가운데 선을 그어 서로 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전엔 우리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북측 판문각 앞 팔각정에서 까먹으며 “같이 먹자” 하면 처음엔 사양하다가 나중에야 하나둘씩 와 함께 도시락을 먹기도 했다. 우리가 “맛있느냐?”고 물으면 “시장이 반찬이라지 않는가” 라고 대답하던 그들 노동당원도 본래는 역시 인간이었나 보다. ㄹ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 협정 조인식(위)과 오늘날 남측 지역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판문점 출입기자 동우회 정전60주년 기념 모임

휴전 6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 당시 판문점을 출입했던 각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그 옛날 취재 비화를 털어놓으며 환담했다.

지난 7월 24일 서울프레스센터 19층 무궁화홀에서 오찬을 함께한 이날 모임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판문점 출입기자 동우회는 그동안 정기 모임을 자주 갖지 못했으나 정전 협정 60주년을 계기로 진용을 새로 갖추고 새 출발했다. 지난 5년 동안 이모임의 회장직을 맡아왔던 신경식(전 대한

일보 정치부장·4선 국회의원·정무장관 역임) 본회회우를 다시 회장으로 추대하고 총무는 최종수(전코리아헤럴드사 진부장)본회회우가 계속 맡기로 했다.

홍원기 대한인문학회 회장은 이날 초청인사로 참석해 6·25참전언론인회가 심혈을 기울여 출판한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를 비롯한 그간의 활동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집 김한길 신경식 이도형 이종기 지갑종 한영도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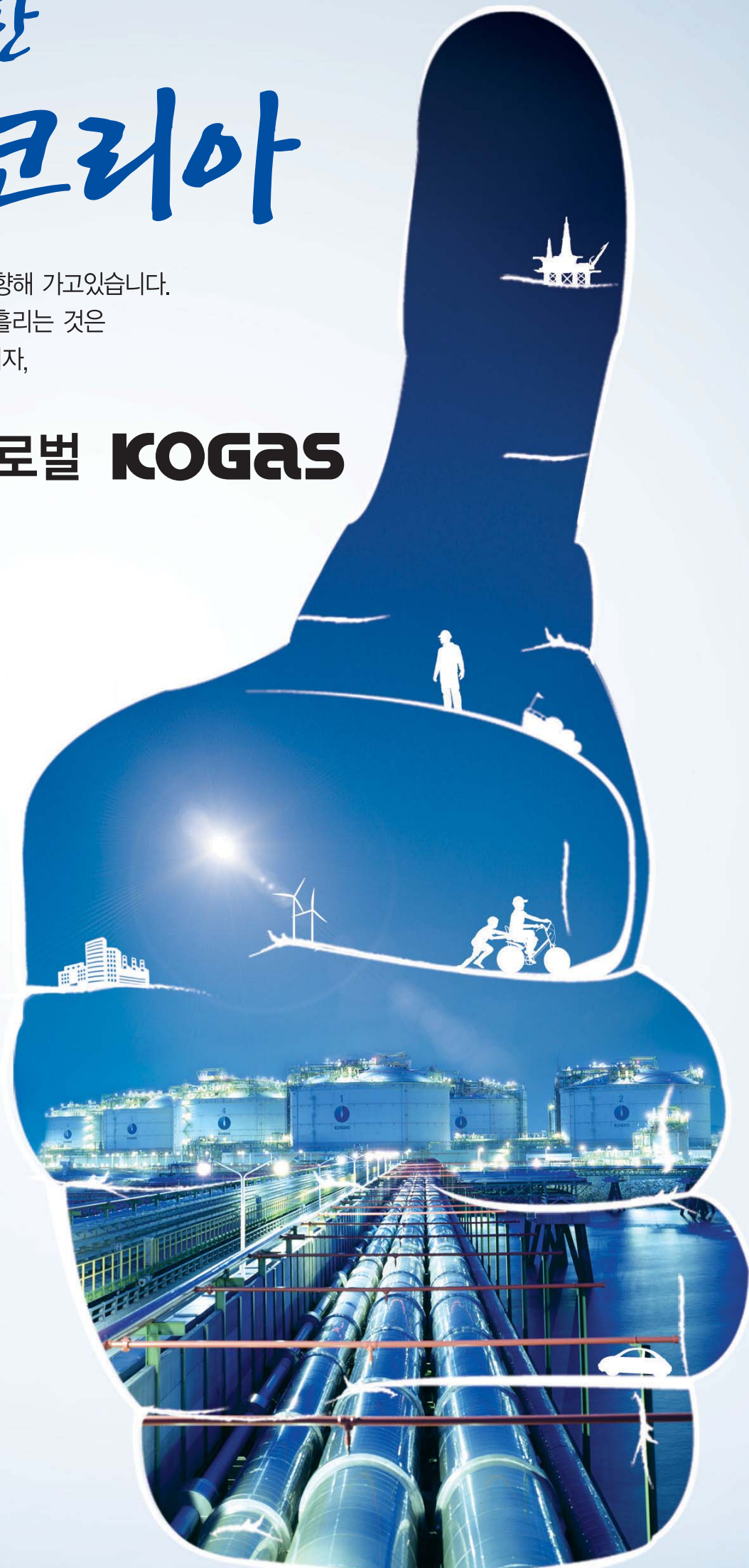
프레스센터 19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판문점 출입기자 동우회 모임.



국민행복을 위한 에너지코리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부국을 향해 가고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확보에 땀 흘리는 것은
세계 앞에堂堂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자,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KOGAS



글로벌 에너지 종합기업, KOGAS는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행복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ETTER ENERGY, BETTER WORLD

溫故知新

對馬島는 우리 땅이다



황원갑

·본회 전문위원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나서는데 우리라고 대마도는 본래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근거를 들어보겠다.

대마도는 일본 본토에서는 150km나 떨어져 있지만 부산에서는 49.5km에 불과하다. 대마도의 개척은 신라 실성 이사금(實聖尼師今·402~417년 재위) 시절에 먹을 것이 없는 천민들이 대마도로 건너가 섬을 개척하자 임금 이들에게 곡식과 재물을 보내주게 되었고 이들이 해마다 조공을 바친 것이 시초였다. 그 뒤 고려 선종(宣宗·1018~1094년 재위) 11년에는 대마도 도주에게 고려 관직인 구당관을 제수했다. 또 조선 태종은 이렇게 말했다. “대마도는 탐라(제주도)보다 작은 섬으로 본래부터 우리 땅이다.”

우리나라가 왜구의 근거지 대마도를 정벌한 첫 번째는 고려 말이었다. 고려 조정은 창왕 1년(1389) 2월에 경상도 도원수 박위로 하여금 전선 100척을 이끌고 대마도를 정벌케 했다. 고려원정군은 대마도에 이르러 해안에 정박하고 있던 왜구의 배 300여 척을 불태워버렸다. 이어서 상륙부대가 섬에 상륙하여 해안의 가옥들을 불태웠다. 여기에 박자안의 후속부대가 도착하여 섬 안 깊숙한 곳까지 수색작전을 펼쳐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동포 100여 명을 구출했다.

두 번째는 조선왕조로 접어들어 세종 1년(1419)에 삼군도체찰사 이종무(李從茂)에 의해서였다. 조정의 명을 받은 이종무는 그해 6월 17일에 9명의 절제사를 이끌고 거제도도를 출발했다. 그때 그는 휘하에 1만 7천 285명의 군사, 227척의 전함을 거느리고 있었다. 6월 19일에 풍랑이 몇자 함대는 거제도 남쪽 주원방포에서 재출항해 20일 오시에 척후선 10여 척을 대마도에 상륙시켰다. 그때 대마도의 왜인들은 본도인(本島人)들이 약탈한 물품을 가득 싣고 돌아오는 줄 알고 술과 고기를 장만해 환영하다가 결국 조선군의 공격이란 사실을 알게 되자 쫓겨가 빠지게 허겁지겁 달아나기에 바빴다. 두지포에 정박한 본군은 왜구의 두목에게 항복을 권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

이에 출전하여 왜구의 배 129척을 빼앗아 쓸 만한 배 20여 척을 제외하고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가옥 1천 939호를 불태우고 왜구 참수 114명, 포로 21명의 전과를 올렸고, 포로가 된 중국인 131명을 구했다. 또 이종무는 29일에 다시 두지포로 군사를 보내 가옥 68호와 적선 14척을 불태우고 왜구 9명을 참수하고 우리 백성 8명을 찾아냈다. 곧 풍랑이 닥쳐올 것이란 예보에 따라 이종무는 7월 3일 군사를 거두어 거제도도로 돌아왔다.

이종무의 대마도원정 뒤 대마도 수호

(守護)에게 항복을 권하는 글을 보내도록 했는데, 그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는 대마도는 경상도 계림(鷄林)에 예속되었으니 본래 우리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文籍)에 실려 있음을 분명히 상고할 수 있다.

다만 대마도는 땅이 매우 협소하고 또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왕래가 불편하여 백성들이 살지 않았더니, 왜노(倭奴)들 가운데 제 나라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모두 이리로 몰려들어 굴혈(掘穴)을 만들고 살며, 어떤 때에는 도적질을 하는 가운데 우리 백성들을 겁탈하여 전국을 약탈하고 마구 살해하며 집에 불을 놓는 등 흉악무도한 짓을 자행해 왔던 것이다.’ 라는 대목이 있다.

이를 봐도 대마도가 신라 때부터 우리 땅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일 이때 대마도를 완전히 정복하고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느니 하는 망언은 애초부터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대마도는 독도보다

도 훨씬 가깝지 않은가. 그때 이 서신을 받은 대마도 수호가 사신을 보내 우리 조정에 항복함으로써 대마도를 다시 경상도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 뒤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에 대마도는 도로 일본 땅이 된 것이다.

중종 때에 발간한 ‘동국여지승람’에 대마도는 조선 영토로 기록되었고, 나중 순조~ 고종 연간에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도 ‘대동여지도’에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1855년 영국에서 제작한 지도에는 대마도가 조선령이라고 되어 있고, 1864년 미국의 페리함대가 사용한 아시아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령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인 8월 18일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또 1949년 1월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대마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조공하던 우리 땅이다.”라고 말했다. 그해 1월 18일에는 제헌의원 31명이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6·25전쟁 중이던 1951년 4월 27일에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보낸 문서에는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포기하고 그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처럼 근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어찌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란 저들의 주장에 맞서 대마도는 한국 땅이니 반환하라고 하지 않는 것인가. 독도도 우리 땅이지만 대마도도 우리 땅이다! [圖]

회우들이 펴낸 신간

김성환 회우 ‘고바우의 유식한 잡학 왜?’

고바우 김성환 회우가 글과 함께 그림을 곁들인 ‘고바우의 유식한 잡학 왜?’란 제목의 책을 냈다.

“블루진의 색은 왜 푸른가?” “럭비공은 왜 타원형인가?” “골프공엔 왜 구멍이 많은가?” “배 크기는 왜 ‘톤’으로 부르나?” “진수식 때 삼폐인은 왜 터뜨리나?” “쪽발이의 어원?” “아카데미상의 오스카는 누구?” “최초의 미인 콘테스트”, “샬러리맨의 어원은?” “경호원이 술집 간 사이 암살된 링컨”, “과잉경비로 목숨 잃은 스탈린”, “설령탕의 어원” 등등. 평소엔 무심히 봐 넘기는 물건이나 일에 대한 궁금증을 삽화를 곁들여 알기 쉽게 일일이 풀이해 놓은 책이 바로 ‘고바우의 유식한 잡학 왜?’이다.

책은 제1장 생활상식(38개 항목), 제2장 어원과 유래(31개 항목), 제3장 유식한 잡학(119개 항목), 제4장 전쟁과 무기(70개 항목)로 나누어 모두 네 파트, 258개 항목에 걸쳐 각각 궁금증을 풀어주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 각각의 내용 설명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다 항목마다 전체 문장이 길지 않게 짤막짤막하게 구성돼 있어, 읽는데 지루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특히 각 항목마다 내



용에 걸맞은 삽화를 그려 놓아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그런가 하면 김성환 회우의 트레이드 마크인 고바우 영감이 삽화 이곳저곳에 등장, 고바우 세대에게는 남다른 지난 날의 향수를 던져주기도 한다.

김 회우는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째서? 왜? 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 봐도 대개는 글썽요?라고

고개를 가웃하기만 한다. 사전에도 없고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알아내거나 물어보기는 더욱 어렵다. 또 사건의 배경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인류의 역사란 전쟁의 역사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 전쟁엔 어떤 인물이 어떤 무기의 전술로 이기고 졌으며 어떤 행운이 따랐나? 하는 것도 되짚고 싶었다.”

그는 이 책을 쓰는데 약 3백권의 책과 전문서적을 참고하고 인용했다고 밝힌다. 1990년대부터 2000년초 사이의 참고문헌이어서 최근의 사정과는 숫자상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달라진 규정도 있을 수 있어 앞으로 가필, 수정, 재편집의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을 것 같다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책을 읽어 봐 줄 것을 당부했다. [圖]

말로만 불러오던 이름

‘서울’ 地名 小考

광복후 공식문서 기록

조선시대 서울에 500년 왕도를 세울 때, 태조 이성계는 1394년(태조 3) 12월 12일 백악산(白岳山) 아래로 가서 지세를 살폈다.

“이 땅의 형세를 보니 왕도를 세울 만하다. 더욱이 조운(漕運)이 통하고 전국에서 거리도 균등하니 사람들이 사는 일에도 편리한바가 있으리라”

태조가 한양을 왕도로 삼고 한 말이다. 그리고 다음날 13일에 정도전 등 여러 신하들과 무학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늘 사용하는 서울의 지명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내력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 할 수 있는 자료가 흔하지 않다. 1,050만명의 거대한 인구를 안고 있는 수도 서울의 지명은 8·15 광복과 더불어 미군이 진주하면서 느닷없이 한성부(漢城府) 또는 한양(漢陽) 경성부(京城府)를 서울이라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행·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부르면서 탄생한 것이 전부이며 한글로 된 서울의 지명에 대한 유래는 그 누구도 정확한 내력과 근거를 정리한 것이 없다.

백제로부터 조선왕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1,15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수도 서울에 관한 지명은 나라의 도읍지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칭호로서 한자로 京의 뜻이 된다고 적고 있다. (서울시시사편찬위 간행·서울600년사)

이와 같은 논리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으로 전개하는 통일된 학설이며 京城府史(경성부 刊) 朝鮮史(조선사편수회 편)등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체계적으로 찾아보면 三國遺事에서는 신라 시조 赫居世왕이 육부 부족의 추대로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徐那伐 또는 徐伐 이라 하였으며 三國志등 중국 사서에 나오는 斯盧, 斯羅, 新盧 등의 국명 또한 그 音 訓으로 보아 同名異寫라 하고 서울의 古記寫에 나오는 徐伐, 徐那伐, 徐野伐 또는 斯盧, 斯羅, 新盧는 백제의 도읍명 所夫里와도 동의어가 되며, 그 원의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이론이 있기도 하지만 대략 徐, 斯, 新, 所는 높다는 高, 신령을 의미하는 우리말의 수리, 숲, 숲의 音寫이며 伐, 盧, 羅, 夫리는 野原을 뜻하는 별(별관)의 음사로서 성읍·도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태조 李成桂가 원년 개성에서 개국할 당시 도읍을 한성으로 정하고 1394년 10월 28월 漢陽으로 천도하면서 왕도의 지명을 한성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新京(新都) 舊京(舊都) 등으로 적고 開京 또는 南京으로 대신 하였다가 漢城府라 불렀다.

隆熙4년(1910)6월 일제의 강점 통치가 시작됨과 아울러 1924년 (대정 2년) 10월 30일 한성부를 경기도 내에 京城府라 하였고 8·15 광복 직후까지도 한성부와 경성부 등 순 한자의 지명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순 한글로 된 지명을 문서화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이 한문으로만 표기하고 문서화한 지명을 굳이 서울이라는 한글 지명을 원용하거나 의사화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논리이며 원래 서울이라는 지명 또한 어디까지나 한글의 서울이어야만 옳은 것이며 구전이나 전설로 이어지는 사실은 정사로 볼 수 없으며



김관태

·본회 회우
·전 서울신문사업국장
·박물관 도슨트



말로만 불러오던 ‘서울’이 공식문서에 등장한 광복 직후 서울전경.

야사에 가까운 속설로 보아야할 것으로 믿는다.

원래 서울이라는 용어자체는 고려시대 개경, 남경을 두었을 때 개경 사람들이 지금의 서울인 남경을 서울이라고 부름으로써 서울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전 세계에 전파시킴으로써 오늘의 한글 지명 서울이 국제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광복과 동시에 진주한 미군이 느닷없이 서울이라는 지명을 쓰게 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전파했다는 근거로는 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절 그들이 숨어서 선교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양반 계급이나 선비들의 접촉이 차단된 환경에서 일반 서민들을 접촉하는 한계 때문에 그들의 일상생활의 관습과 언행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들은 1824~1834년 金正浩가 제작한 것으로 믿어지는 한문으로 된 최고의 서울 지도 ‘首善全圖’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를 한글로 번역하여 휴대하고 선교활동을 하였으며 각기 본국에 보고할 때 SEOUL이라는 지명을 사용했으며 오랜 세월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해

왔던 서재필 박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내면서 ‘조선 서울 초칠일 금요일’이라고 창간호(제1권. 제1호. 1896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 지명을 활자화시킨 것이다.

광복 후 미군정은 한성부, 경성부와 함께 서울을 지명으로 사용하다가

늘의 서울을 갑자기 충청도로 옮긴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튀어나오니 씁쓸하기 짝이 없다.

※일본의 강점과 함께 한성부를 경성부로 바꾸면서 한성부는 단순히 관내의 관치만 하였고 주 업무는 토지 가옥의 증명이나 저당권의 집행 등에 불과하다고 깎아 내렸다.

특히 경성이라는 지명은 내선일체, 즉 내(일본) 선(조선)은 한 몸이므로 한 국가에 두개의 수도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 수도인 동경의 아래 토막인 京자와 한성의 아래 토막인 城자를 합쳐 한성부를 깎아내려 京城府로 지명을 정하였다.

역사상 우리나라의 지명에는 京자를 개경, 남경과 같이 아래에 두었지 위에는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학자나 위정자들이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지명 하나에 이르기 까지 이와 같이 악랄한 방법을 썼던 것이다.

서울에 대한 名稱 變遷(京城府史)

1. 北 漢 山
2. 北 漢 城 : 三國時代, 특히 百濟時代의 호칭으로 남쪽의 廣州市와 그 부근을 한성, 한산성으로 불렀다. 북한산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산악을 지칭하는 것만이 아닌 이 부근의 地名이었다. 당시에는 지금의 북한산을 負兒山 또는 三角山이라 칭하였다.
3. 北漢山郡
4. 南 平 壤 : 高句麗時代 호칭
5. 新 州 : 新羅 24대 眞平 14년에 개칭
6. 北漢山州 : 眞平 28년 新州를 폐하고
7. 南 川 州 : 眞平 29년 北漢山州를 폐하고
8. 漢 陽 郡 : 新羅 35대 景德 14년에 개칭
9. 楊 州 郡 : 高麗時代 초기의 호칭

※이상은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근의 각 지방을 포함한 비교적 광범위한 명칭이다.

10. 南 京 : 高麗 15대 肅宗 6년 개칭
11. 漢 陽 府 : 高麗 25대 忠烈 34년 개칭
12. 漢 城 府 : 朝鮮 太祖 3년 개칭
13. 京 城 府 : 日帝 明治43년(1910년) 10월 1일 개칭
14. 서 울 시 : 1946년 8월 15일 서울시헌장 제정과 함께 선포
15. 서울特別市 :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개칭 (중국어로는 首尔市로)

※통칭 서울이란 신라시대 이래 국가 또는 수도를 의미한다는 說과 京城역시 수도라는 통용어를 의미하며 그 밖에 首善 京都 都城 郡 邑都下 長安 八萬長安 皇城 京兆 廣陵 門安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도움 주신 분

김기빈 토지박물관 지명조사팀장
전우용 서울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150년이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오

올 여름 피서 - 실버영화관은 어떨까요

폭염의 계절--8월이다. 젊었을 때 같은 훌쩍 피서를 떠난다지만 이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차량 이용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자녀를 따라가자니 오히려 짐만 될 것 같아 그것도 포기하는데 그럼 적당한 피서법은 없을까.

창경궁 등 고궁과 남산길 산책도 좋은 피서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석한다거나 시원한 영화관에서 그 옛날 추억의 영화를 보는 것도 훌륭한 피서법이 될 것이다.

시내 3군데에 실버영화관

젊은 시절 추억이 엮힌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서울시내 중심가에 세군데나 있다. 종로엔 옛 허리웃극장 자리에 ‘허리웃 클래식 실버영화관’이 있고, 중구엔 옛 명보극장 건물에 ‘명보실버극장’이 최근 문을 열었다. 또 서대문 동양극장터엔 서대문 로터리에 있었던 화양극장에서 옮겨온 ‘청춘극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극장은 종로의 ‘허리웃 클래식 실버영화관’ 빼고는 두 군데다 새로 개관한 곳이라서 수수한 인테리어에 청결할뿐더러 객석도 220~300석 까지 갖추고 있다. 이들 영화관엔 영화도 영화지만 카페가 있어 언제든지 2천원으로 냉온 음료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 모두 시내에 있어 친구들 만날 때 비싼 커피숍 보다는 이곳이 좋은 만남터가 될 것 같다. 서울 근교인 안산에도 ‘안산명화극장’이 있다.

실버극장이 마땅찮으면 입장료 50%가 할인되는 대한, 서울, 롯데 등 일반극장을 찾는 것도 좋다. 이곳은 대개 일반영화 관람료가 8천원으로 4천원이면 볼 수 있는데 단 3D입체영화는 할인이 안된다. 또 영화가 끝나면 바로극장을 나와야 한다.

각종 문화행사도 푸짐

‘명보실버극장’과 ‘청춘극장’은 각각 10여개의 문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를 소개하면 테



허리웃 클래식 실버영화관(위)과 청춘극장(왼쪽), 명보실버극장(오른쪽).

마철도여행, 협곡열차투어, 독신이성고제행사, 어르신스타일 코디, 주말 노래자랑, 건강체조와 웃음치료, 건강상담, 시니어 에티켓 강의, 노년기 정신건강강의 등 다양한 행사와 강의를 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값싸게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는 물론 북카페도 있고 영화표를 인근 식당이나 이발소, 떡집에 보여주면 500원에서 1,000원까지 할인도 해줘 시원한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밥값 할인도 받는 일석이조(?)의 혜택도 있다.

‘청춘극장’ 같은 곳에선 입장권을 사면 차와 팝콘을 주고 2만원의 상품권이

걸린 추첨권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아침 1회 상영 때는 조조할인으로 1,000원만 받는다.

‘허리웃 클래식 실버영화관’의 윤옥희 홍보팀장은 회원들을 상대로 영화관 카드인 ‘행복문화카드’를 발급, 체크카드와 병원, 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 요일별로 쿠키와 떡 음료 등을 제공하며 조조할인 네 번을 오면 무료로 한번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영화 상영하나

1950년대부터 60, 70년대 상영했던

그야말로 추억의 명화들이다. 이달 8월에 상영할 영화를 보면 허리웃 클래식 실버영화관(전화 02-3672-4231~3)은 ‘맘마미아’, ‘사랑과 영혼’.

명보실버극장(전화 02-2277-2807)에서는 ‘애수’ ‘보바리 부인’ ‘황금연못’, ‘깊은밤 깊은곳에’ ‘7일간의 사랑’.

청춘극장(전화 070-4222-8869)은 ‘애수’ ‘여자의 일생’ ‘킹콩’ ‘사운드 오브 뮤직’.

안산명화극장(전화 031-403-3829)에선 ‘킹콩’ ‘애수’ ‘여자의 일생’ ‘사운드 오브 뮤직’을 상영한다. 그리고 각 극장에서 한 달에 한번 50~60년대 유행하던 극장 쇼를 공연한다. 여기엔 가수, 코미디언 등이 나와 옛추억을 되살려준다. TV쇼보다는 훨씬 실감나는 무대가 펼쳐진다.

멋쟁이 할머니들 많아

세군데 영화관의 고객은 역시 실버영화관답게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 고객이고 특히 그 옛날 한창 멋 내고 다녔을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관객보다 3배는 많다. 이들은 한껏 멋을 내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들어오기도 하고 90세가 넘는 노인들도 집에 있기 싫어 자주 온다고 한다. 영화관은 단관이기 때문에 하루 4번 같은 영화를 내내 상영하는데 어떤 노인은 별로 갈 곳이 없다며 2~3번이나 보는 경우도 많다고 극장 관리인은 귀띔했다.

영화 상영 중 클라이맥스 때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치 50년대 극장처럼.

이들 세 극장의 가장 특이한 점은 종업원들 모두가 60세 이후의 실버들이라는 것.

단정한 유니폼에 점잖은 말씨가 듣기 좋다. ‘명보실버극장’의 이종학 부사장은 노인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모두 30여명의 남녀 노인을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하나같이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하고 극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4]

이보길 편집위원 기

인간수명이 연장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 낯설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잘 발달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요, 헛된 꿈이 아닐까. 100세가 아니라 80~90세까지 만이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가 9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이 기간을 3등분을 해 본다.

▲청년기(1~30세), ▲중년기(30~60세), ▲노년기(60~90세)로 분리한다.

청년기는 태어나서 30년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마치고 직업을 갖는 기간이다. 중년기는 직장에서 정년퇴임까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만 한다. 노년기는 직장을 은퇴한 후 지난 일을 회상하며 마지막 삶을 살아간다.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 전후라고 한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60세 전후이고, 일반기업은 50세 전후에 은

‘은퇴후 행복’의 지름길

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년기를 맞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기와 중년기와는 달리 은퇴 후 아무런 기반 없이 무작정 30년을 살아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화제가 된 일 본 다큐멘터리 영화 ‘엔딩노트’에서 주인공은 40여 년간 긴 셀러리맨 인생을 마치고 말기 암 6개월 판정을 받았다. 이 주인공은



윤재홍

·분회 회우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

남은 시간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제2의 인생 준비 ‘엔딩노트’는 90세 시대를 대비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이 주인공이 제시한 다섯 가지 노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같다.

첫째, 건강을 챙겨야 한다. 즉, 정년까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가르치고 부부싸움을 하며 젊음을 바친 후

회사에서 은퇴하니 자신의 건강에 소홀해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은퇴에 앞서 꾸준히 은퇴준비를 하여 자신의 건강도 미리 보살피고 준비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자립이다. 즉, 부부는 보통 여성의 나이가 남자보다 대부분 3~5세가 젊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부인은 10년 정도 홀로 사는 경우가 많아 자녀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평생 모은 재산 중 주택은 아내에게 줘야 한다. 자녀들에게는 고기를 잡아 주기 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주면 된다.

셋째, 일하면서 노후를 맞자. 즉, 일은 단순히 은퇴자금과는 상관이 없다.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서 은퇴 후에도 각자 맞는 일을 찾아서 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다. 전문성은 늙지 않는다.

17면으로 이어집니다.

생활수상

‘望八’의 노인들이 가야할 길은 ...

조창화 (본회 명예회장)



이 곳이 백수가 갈 길인가. 히말라야의 칼라파타르(5,560m) 정상에 선 조창화 회우, 뒤편 왼쪽 봉우리가 네팔봉(8,200m), 그 뒤로 중앙에 구름을 이고 서있는 봉우리가 에베레스트(8,884)m이다.

백수란 말을 놓고 그 어원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는듯하다. 白首라고도 하고 白手라고도 하기 때문이다.

白首란 사람이 冠을 벗었다는 뜻이니 말하자면 벼슬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되고 벼슬이 곧 생업이던 시절엔 '벼슬 떨어진 인생=수입이 없는 인생'으로 치부되었음직하다. 요즈음으로 치면 실직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白手란 말은 좀더 사실적이다. 내 손안에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니 실직이 되었건 정년이 되었건 수입 없는 인생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白手乾達이란 말은 있어도 白首乾達이란 말이 없는 것도 적나라한 무일푼의 신세를 표현하는데 예는 白手란 말이 적절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백수생활이 10년을 넘어 20년이 가까워 오는 望八의 노인들에게 새삼 백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씁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정기적 수입이 끊기고 싶은 종든 죽을 날을 향해 뚜벅 뚜벅 걸어 가야만하는 망팔의 隊列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패잔병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랴. 우리들 망팔의 노인들은 그동안 세상풍파에 찌들린 얼굴을 온화한 표정으로 위장하고 짐짓 무사태평인 양 여유를 과장 해 보이지만 마음속은 한없이 외롭고 섭섭하고 불안하기만하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산에도 가고 여행도하고 술도 먹어보고 책도 읽어 보지만 그런 것으로 노후의 안락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망팔의 노인들이 느끼는 공통의 심경이 아닐까.

오죽하면 그 동안 까맣게 잊었던 가족들의 생일을 수첩에 적어 놓고 친척들 친구들의 생일을 챙기고 동창들의 모임, OB들의 모임 등을 빠뜨리지 않고 적어놓고 다니겠는가. 할일 없이 빈둥거린다는 소리가 듣기 싫고 비록 백수지만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있다는 주변의 칭송(?)을 듣기위해 위세를 부려보는 가련한 우리들의 모습. “나는 얼마나 ‘참나’를 발견하고 있을까”

얼마 전 점심식사 자리에 우연히 앉다보니 38년생인 내옆에 28년생의 선배가, 그 옆에 18년생의 대선배가 나란히 앉게 되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나누며 느낀 것은 이 분들이 나름대로의 엄격한 룰을 만들어 그 틀에 자기를 대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없어도 아침은 8시 반에, 점심은 정확히 12시

반에, 저녁은 6시전에 반드시 끝낸다, 아무리 산해진미의 안주라 해도 소주는 3, 4잔, 2차는 죽어도 안간다,

천하의 절경이라도 봉우리를 쳐다만 보고 중도에 하산한다 등 친구따라 강남에 가기는커녕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친구와의 동행을 칼처럼 거절하는 드라이한 룰을 신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홍보며 다툰다는 말이 있듯이 나도 어느 사이엔가 이러한 룰에 젖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이 무미건조한 백수의 명에--- 그래도 몇 가지의 원칙은 고수하고 싶다.

첫째, 건강을 유지해야지.

누군들 건강하고 싶지 않겠는가. 다만 내가 수명을 연장시킬 수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수명은 타고난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둘째, 돈이 많으면 무얼 하나. 그 씬 씬이를 알아야지. 억만금인들 누가 마다하겠는가. 돈은 항상 부족한 것이 정상일진데 부족한채로 만족하는 버릇을 배워야한다. 누군 하룻밤 수 백만원의 술로 배탈이 났는데 나는 소주 반병에 이렇게 행복하구나.

셋째, 마음을 비워야지.

이것 또한 누군들 모르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왕년에 한 두번

으스대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 나와 남의 관계에서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

넷째, 깔끔해야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아무 옷이나 입고 수영도 안 껴고 지저분 해봐야 남들은 나를 더 무시할 뿐이지.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더 위함을 받으려면 깔끔 또 깔끔해야지. 그리고 부지런을 떨어야지. 집 청소는 기본이고 전구도 갈아 끼우고 쓰레기도 치우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도 하고 아침저녁 준비도 해야지. 안해서 그렇지 요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데.

다섯째, 경우가 밝아야지.

이친구 저친구한테 얻어 먹으면서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되지. 하다못해 두 번에 한번이라도 반례를 할 줄 알아야지. 정 형편이 안되면 점심 얻어먹고 커피라도 뽑아 올 줄 알아야지.

여섯째, 경조에 무관심 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할지 몰라도 특히 남의 경사에 그렇게 열심히 나갈 필요가 없다. 슬픈 일에 가서 위로 하는 것 누가 말리랴. 친구들 만나 공술 얻어 먹는 맛에 길 들여지면 안되지. 3만원, 5만원 들고 가 혼주와 악수 한번 하고는 식당으로 쫓아가 5만원, 10만원 짜리 밥 얻어 먹는 맛에 인이 박이면 추해 지지. 차라리 돈 만원이라도 우송 해주면 혼주를 돕는 길이 되지.

일곱째, 기록을 습관화하자.

건성으로 들은 약속, 전화로 들은 시간 장소를 까맣게 잊거나 잘못 기억해 낭패를 본 경험-- 백수들의 일반적인 증세다. 수첩에 단단히 기록하고 수첩을 분신처럼 갖고 다녀야지. 그 수첩이 나중에 좋은 쓸거리가 될지 누가 아나.

여덟째, 자연으로 돌아가자.

망팔의 동지들이여. 어차피 우리들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우리들의 지금 시각은 9시 뉴스도 벌써 끝나고 10시쯤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잠이 많은 사람들은 9시 뉴스도 못 본채 잠(?) 자리에 들어 갔고 잠이 없는 사람은 12시까지 버티겠지.

망팔의 동지들이여. 자연으로 돌아가자. 한라산, 지리산 계곡이라면 더할 나위없고 근교의 이름없는 눈 덮인 계곡이라도 좋다. 나를 그곳에 세웠을 때나 망팔의 백수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Q]

16면에서 이어집니다.

넷째, 항상 재미있어야 한다. 즉, 슬픈 노년, 은퇴대란, 노인 빈곤 등 우울한 이야기는 잠재적 은퇴자에게 공포심을 제공한다. 그러나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지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항상 즐겁게 살 수 있다.

다섯째, 친구와 함께 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정서적으로 가장 큰 것이 고독이라고 한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는 친구는 소중한 인맥이요, 큰 자산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라는 긴 여행을 떠날 때 배우자와 더불어 좋은 친구와 함께 한다면 더 큰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본 영화 ‘엔딩노트’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 이에 앞서 은퇴자들의 사고방식전환도 매우 중요하다. 은퇴자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룬 은퇴자들이 은퇴자금으로 사업을 해서 망한 사업의 1위가 ‘요식업’, 2위가 ‘프랜차이즈 전문점’, 3위가 ‘펜션사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은퇴자는 어떤 사업에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한다.

서양에서는 은퇴자들이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티 빌링턴 박사가 쓴 ‘멋지게 나이 드는 법’ 책에서는 인생을 8년 더 살 수 있는 비결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돈을 세계여행 등으로 다 써버리고 자녀들에게는 적당한 관심만 갖고, 은퇴자 스스로가 인생을 즐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 하고있다.

이 밖에도 미국과 유럽의 노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들은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모보다 자신 스스

로가 인생을 즐기면서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이 약 8년이상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자식들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은퇴자 스스로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100세 시대’를 앞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건강한 90세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은퇴 후 30년간의 노년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보람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목표를 정해야한다. 또 이에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갖추어 이를 실천하는 것만이 은퇴 후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Q]

회우동정 가나다순

6·25 참전 유공자회 교양교육



곽찬호(한국통일문화진흥회이사장)원로위원회 간사= 지난 1월부터 매월 한차례 씩(90분간) 대한민국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서울 성동구지회회원 100여 명에게 정기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간지 자유신문 회장 취임



김길홍(전 경향신문 편집부장)회우= 지난 15일 한국자유총연맹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자유신문사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신아일보기자로 언론계에 진출해 경향신문 편집부장,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 13, 14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동해지명 국제 세미나 참석



문명호(전 문화일보 논설주간)본회 주필= 8월 22~2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사단법인 동해연구회, 동북아역사재단과 이스탄불대학교 아타튀르크 역사연구소 공동 주최 제19회 ‘동해지명과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패넬토론자로 참석.

‘박근혜-시진핑 정상회담’ 대담



여영무(뉴스엔피플 닷컴 대표·남북전략연구소장)논설위원= 지난 6월 26일 TV조선에서 ‘박근혜-시진핑 정상회담의 제’를 주제로 대담. 6월28일 엔KBS라디오에서 ‘한·중정상회담과 북·중관계’에 관해 대담하는 등 잦은 TV출연으로 동분서주.

세종재단 이사 연임



이성춘(전 한국일보 논설위원)회우= 7월 1일자로 세종재단 이사로 연임.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에 선임

이태영(전 중앙일보 편집국장)본회 부회장=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겸 상설위원장에 피선. 이부회장은 현재 체육연인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형균(전 경향신문 편집국장)본회 편집고문= 6월13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평의원 총회에 참석한 후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을 방문, 동창회 현황을 살펴보고 27일 귀국했다.

재미 서울대 동창회 참석



이형균(전 경향신문 편집국장)본회 편집고문= 6월13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린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평의원 총회에 참석한 후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을 방문, 동창회 현황을 살펴보고 27일 귀국했다.

6·25 당시 전쟁 상황 생생히 증언



임학수(전 동아일보 편집부장)원로회우= 지난 7월 24일자 동아일보 A16면에 6·25 전쟁 당시 중군기자로 한국 전쟁의 참상과 실상을 취재 보도했던 당시 상황을 소상히 증언했다. 임학수 원로회우는 6·25전쟁 당시 동양통신과 연합신문 동아일보 기자로 종군했다.

이승만 기념회보 75호 발행



제재형(한국일보 사우회 회장)본회고문= 지난 7월 19일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48주기에 맞춰 이승만 박사 기념 회보인 ‘이승만 회보’ 75호를 발간했다. 제고문은 이 회보 편집인으로 제작 책임을 맡고 있다.

월간 드림 빅 편집·논설상임고문



최귀조(전 한국경제 편집부장 사진·위)이사·조규석(전세계일보 논설실장 사진·아래)편집위원= 지난 7월 1일 세계평화재단(GPF)에서 발행하는 월간 Dream Bik편집상임고문과 논설상임고문으로 각각 선임 됐다. 사무실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62길 동성빌딩 4층 전화 02-3448-85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62길 동성빌딩 4층 전화 02-3448-8500

이혜복 상임고문 입원

이혜복 본회 상임고문이 지난 6월 27일 오후 뇌진탕으로 이대목동병원(서울 영등포구 목동 소재) 중환자실에 입원중입니다. 회우 여러분과 함께 쾌유를 빕니다.

본회 사무실 스마트폰 충전기 비치

대한언론인회는 7월 24일 회우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스마트 폰 충전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공휴일 제외) 사무실에 나오시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본회 사이버위원회 제공)

주소·전화번호 변경

이상호 회우=경기 의정부시 신곡 1동 한국아파트 609동 1805호
김병무 회우=010-4640-0721

저서 보내주신 분

유한준 회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창조경제 박근혜 리더십’ (2013년·광문각·값 12,000원)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고유석(高庚錫)



1943년 4월 13일생.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킨텍스로 284 1905-304 전화 010-6260-2912
한국외국어대정외과졸업. 경향신문 입사(72), 사회부 문화부, 정치부 전권부기자, 생활과학부장, 사회부장, 전권부장, 제작국장 이사대우, 경향하우징페어 대표이사 역임 (32년 재직)

권도호(權度鎬)



1936년 6월 25일생. 부산시수영구 남천동로 41번지 코롱골든비치 111동 1501호 전화 051-623-3355 / 010-2572-0993
동아대 국어 국문학과졸업. 동대학원 석사. 경향신문 편집국장(1962년), 제2사회부장 대우, 지방부차장, 취재본부장, 문화일보 사회부장, 편집국 기획위원 (35년 재직)

사우회 소식

사우회보 135호 발행

KBS

KBS사우회(회장 정근춘)는 지난 7월 1일자로 회보 135호를 발행했다. 이번호에는 사우회 창립 24주년기념 울진원자력발전소 방문기(6면에 화보)를 머리에 싣고 4면에는 이상수 편집위원과 박남순 회우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김진기(전 KBS 홍보부장) 본회발전기획위원장의 ‘그때 그 이야기’도 주목을 끈다. KBS사우회는 2013년 10월 15일까지 회우 종합 검진을 실시한다.

신록 향기에 젖은 힐링 야유회

SBS

SBS사우회(회장 임형두)는 최근 경기도 연천 허브 빌리지 일대에서 야유회를 갖고 친목을 다졌다. 이날 야유회는 예년과 달리 힐링체험 여행을 실시해 참가한 60여명의 사우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사우들은 또 중부전선 28사단 태풍전망대를 방문해 적막이 감도는 군사분계선을 바라보며 남북분단의 현실을 실감했다.

‘한국일보를 살립니다’ 호소문 발표

한국일보

한국일보 원로퇴직사우들은 지난 17일 전·현직 사우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하루빨리 노사 화합으로 “찬연한 한국일보 깃발을 다시 세우자”고 호소했다.

퇴직사우들은 이 호소문에서 한국일보는 현재 노·사 갈등으로 큰 위기에 몰려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경영 부실에 책임 있는 최고경영자들은 한국일보를 아껴온 독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노조원들에게는 절차를 배제한 채 노조성명을 한국일보 1면에 기습적으로 게재하여 편집국봉쇄의 빌미를 준 것은 신문발행권의 침탈이라고 지적했다.

이 호소문에는 김종규 전 한국일보 사장, 윤임술 전 한국일보편집위원, 이형 창간사원(전 논설위원), 이순기 전 한국일보편집부장(견습1기), 정태연 전 코리아타임스사장, 김성우 전 한국일보주필, 이원홍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손일근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제재형 한국일보사우회회장 등 원로 사우 72명이 서명했다.

본회 136차 이사회 하반기 사업계획등 심의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7월 16일 제136차 이사회를 열고 금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하반기 사업계획으로는 대토론회(9월중), 대한언론상 시상(11월중), 6·25참전기 출판(9월 10일 출판기념회), 문화탐방(10월중), 합동고회연 겸 송년회(12월 20일), 기타 본회 활성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본회 상반기 회계 감사

본회 김호기 송호빈 감사는 지난 7월 12일 11시 대한언론인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상반기 회계 감사를 실시했다.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가나다순·괄호안 납입연도)

김성수(13)	이기환
김진배	(6,7,8,9,
(10,11,12,13)	10,11,12,13)
송호창(13)	조상범(미상 3만원)
신광식(13)	주종환(13)
안종화(13)	한상규(13)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물로 더 행복한 내일, K-water가 만들어 갑니다

깨끗한 물은 희망입니다.
세계 모든 아이들이 깨끗한 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K-water가 함께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KORER ELECTRIC POWER CORPORATION



에너지관리공단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 **100W** 줄이기 꼭 함께 해요!”

모두가 힘을 모으면 올 여름 전력위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문 닫고 냉방으로 더 시원하게!
절전하는 시원한 가게에서 쇼핑해요



여름철 건강온도 26℃!
시원한 옷차림에 건강온도 지켜주세요



오후 2시~5시에는 절전 실천!
하루 중 전기가 가장 부족한 시간은
오후 2시~5시입니다



안 쓰는 플러그 뽑기는 기본!
플러그 뽑기(대기전력 차단)만으로 6%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어요



100W 줄이기



‘한 사람 100W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방법

① TV 1대 끄기 ② LED등 2개 끄기 ③ 에어컨 30분 쉬기

※문 열고 냉방, 26℃ 온도제한 등의 점검시간은
평일 오후 2시~5시입니다.(주말, 공휴일 제외)